

第299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6號

國會事務處

2011年4月11日(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附議된案件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

(10시06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의장 박희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은평갑 출신의 민주당 존경하는 이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은평갑 민주당 이미경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벌 등 20대 대기업의 계열사가 36%나 늘었고 자산규모도 54%가 늘었다는 발표가 10일 있었습니다.

들어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미경 의원 동네 슈퍼까지도 재벌이 진출해

서 영세상인들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벌에 대한 규제를 풀어 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서로 더 붙어서 함께 잘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완화를 했고 그 뒤에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대기업 집단들이 이렇게 많은 확장을 가져온 것은 부득이한 면은 있지만 정부로서는 그런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고 또 동반성장, 더불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정말 동반성장 하려고 하면 이렇게 대기업 재벌들은 점점 자산규모가 늘어나고 노동자·서민들은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다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선진국에는 없는 그런 규제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시행된 것이었지만 불가피한 규

제 완화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로 나타난 모든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종의 제한이라든지 동반성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하고 정부는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필리핀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지금 필리핀은 몇몇 재벌가문들이 통신·전력 회사 등 모든 이 기간산업들을 장악하고 있고 국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져 해외에 가정부, 저임금 노동자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또 그것을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정부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노동현실은 어떤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사태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자료를 보시면 정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강제 진압이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14명이 자살 또는 사망했습니다, 쌍용차에서.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미경 의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총리로서 지금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쌍용차 사건은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와 같이 불행한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법 파업이 장기간 계속되고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경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권력이 투입돼서 그것을 정리한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 노동 조건이나 노동 현실이 열악하겠지만 그러나 근로자들도 법적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자기주장을 하고 의견을 관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의원** 총리께서 또 노동부장관께서 노

동자들은 불법 파업이다라고 얘기하고 늘 기업편을 들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난 2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였던 임무창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1년 전에는 부인이 생활고를 비판해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임무창 씨가 사망했을 때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미경 의원** 단돈 4만 원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복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리하고, 기업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400여 명의 쌍용자동차 고급 노동자 인력들이 정리하고 되어서 거리로 내몰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위한 공권력 행사였는지, 그 이후에 쌍용자동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면 정말 정리하고 이렇게 쉽게 하고 한 가정을 이런 식으로 파탄 내고 14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불법 파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쌍용자동차 이렇게 공권력 투입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쌍용자동차 어찌 되었습니까? 쌍용자동차, 중국 상하이차 기술만 빼먹고 해외자본에게 또 팔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쌍용자동차 그 기업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태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지는 합니다.

그리고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정리하고 등의 이런 절차를 취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리하고는 법에 정한 또 판례로 정한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노사 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행해진 거지만 그 당시에 무급휴직자 복직 문제 같은 것도 관련 조항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상황에 이르렀느냐에 관해서는 노사 그리고 또 노노 간에도 여러 가지 의

전이 엇갈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깝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쌍용차가 아니라도 다른 쪽에 재취업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손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가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께 곧 이어서 질문을 할 텐데요 들어 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총리가 판단하시고 다시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기본적으로 정부가 기업가나 노동자 어느 쪽도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고 비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의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들도 법적 절차를 밟아 줘야 되고 기업가들도 그야말로 함께 성장하는, 애정을 가지고 접근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서로 부딪쳐 있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사회도 노력하고 기업가나 노동자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의원** 기업이 범질서 안 지킬 때 그것은 너무 내버려 두고 지금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파업하면 너무나 강하게 진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들어가지고, 노동부장관 나오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09년 8월 6일 쌍용자동차 노사 합의가 있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이미경 의원** 그 노사 합의에 따라서 지금 몇 명이 복직되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당시 퇴직자가 2152명이었고 그중에 1453명, 67.5%가 재취업했지요……

○**이미경 의원** 몇 명이 복직되었는지 얘기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무급휴직자가 468명이었고요, 이후 희망퇴직자가 11명이 나왔고 돌아가신 분이 1명 계셔서 지금 현재 456명이 무급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당시 합의할 때는……

○**이미경 의원** 짧게 얘기하십시오. 몇 명이 복직되었느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직 복직이 안 됐습니다.

○**이미경 의원** 1명도 안 됐지요,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라고요. 1명도 안 됐다고 얘기하셔야지, 말씀이 왜 그렇게 기십니까?

그다음에 그때 노사 합의해서 민·형사상 고소·고발하지 않기로 했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런데 지금 회사가 지부장 등 상대로 100억 원 이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고 25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미경 의원** 이것 약속 위반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당시에 여러 가지 합의를 했었는데……

○**이미경 의원** 그러니까 약속 위반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 위반할 때…… 안 지켜지고 있고, 그래서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데 노동부는 무슨 일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당시에 합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주주 변경이라든지 회사의 운영……

○**이미경 의원** 다른 합의 말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대부분은 합의가 지켜진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 일부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미경 의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복직되는 것하고 손배소하는 것 취하 안 한 것, 이것 제일 중요한데 안 지키고 있는데 노동부가 무슨 일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저희들은, 이후에 주주들이 변경도 되고 했기 때문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당시 합의가 지켜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들어가십시오.

노동부가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고, 14명이 자살하고 사망하고 있는

데도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노동부다 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기보다는 우선 재취업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3분의 2 이상을……

○**이미경 의원** 부단한 노력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들어가시고,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3분의 2 이상을 취업을 우선 시켰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같은 쌍용자동차 문제인데, 경찰이 노조원들 상대로 쌍용자동차 진압 관련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이미경 의원** 정리해고로 직장을 잘린 사람들에게 회사가 100억 원이 넘는 손해 소송을 하고 경찰은 진압장비가 손상됐다 또 치료비다 해서 20억 원 넘게 손해 소송을 내걸었는데, 이것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그냥 미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불법·폭력행위의 재발을 막고 그리고 또 국가 법질서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경찰로서도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 의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 쌍용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함으로 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이제 이러한 파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아니, 파업이야 할 수 있겠지만 불법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미경 의원** 그리고 파업하고, 길게 하다 보면 약간의 불법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을 보여 주겠다, 본때를 보여 주겠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14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인 타살이다’ ‘정부가 만든 타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정부가 국민들을 그렇게……

○**이미경 의원** 당장 손해소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동자들 목까지 아주 숨이 차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 딱한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자꾸, 많이 가네요.

총리 나오십시오.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 아시지요? 부산 제일의 기업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미경 의원** 지금 한진중공업에서도 정리해고를 하겠다 해서 노동조합이 100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흑자기업입니까, 적자기업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2008년 이후에 수주량이 급감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러나 오너들이 174억 원이나 넘는 배당금 또 나누어 가졌습니다. 점차 점차 줄어서 174억 원인데, 이렇게 배당금을 나눠 가지는 회사에서 정리해고한다 하는 것 말이 안 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정리해고는 요건이 엄격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미경 의원** 값싼 노동력을 따라서 필리핀에 조선소를 한진중공업이 세운 다음에 지난 3년 동안 1척도 수주하지 않았습니, 부산에서는. 그래서 수주를 필리핀으로 빼돌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한진중공업이 문 닫으면 부산 경제가 휘청하고 부산 민심이 휘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의장까지 나서서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경영을 효율화하고 비용을 낮춰서 이득을 올리느냐 하는 측면에서 부산에서는 그런 뜻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필리핀으로 아마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업을 나무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업이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경영상의 문제를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 의원** 한진중공업이 지금 이만큼 크기

까지 우리 국민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진중공업이 수주를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 세금 탈루는 없었는지, 비자금 은닉은 없었는지, 정리해고가 무리한 게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민주당과 야당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하자'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국회에서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리해고의 적법성 여부는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밖의 경영과 관련된 비리·탈법 여부도 수사기관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뜻에 따라서 정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의원** 한나라당이 지금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회는 국회 역할 안 하고 있고, 노동부도 나서서 노동부 역할 안 하고 있고, 사법부에 맡겨라 이렇다면 노동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동부를 지금은 '고용노동부'라고 해서 '고용부'로 불러 달라고 얘기하고, 노동정책은 사라졌어요. 차라리 '고용'도 아니고 '고용자부'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미경 의원** 기업 편만 든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인식이나 또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중심을 잡도록 그건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중심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노동부장관'이라고 부르는데 '고용부장관'이라고 부르는 것을 원하신다면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로 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약칭으로 세 글자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여러 고민 끝에 차선의 대안은 '고용부가 더 낫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래서 '고용' 생각하는 데는 참 많은데, 노동자들의 삶이 정말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노동자' 생각하는 부서가 실제로는 반 또는

없어져 가는 것 같다 생각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노동부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저희들 그렇게 희망을 했던 이유가 노동자는 그래도 지금 일자리를 갖고 일하시는 분이고 실직자들 또 일을 찾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면 고용부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가졌었습니다.

○**이미경 의원** 좋은 일자리는 다 잘라 버리고 비정규직만 늘리는 양적인 늘림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박희태 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비정규직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이 늘어나고 임시직과 일용직 비율이 점차 줄고 있다는 점……

○**이미경 의원** 50% 이상 늘어났고, 그 통계도 다시 따져 봐야 되는 겁니다.

장관, '삼성' 하면 우리나라 대표기업 중의 하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미경 의원** 해외 나가서 삼성 깃발, 삼성 네온사인 보면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 자식들 삼성 취직하면 잔치 열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삼성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2시간 근무가 기본이고, 14시간 일할 때도 많습니다. 휴일도 없이 자다가도 불려 나가고, 화장실에 다녀오면 물량 쌓이기 때문에 물도 마시지 못한다, 이게 전태일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의 증언입니다.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다가 우울증에 걸린 삼성LCD 김주현 군이 지난 1월 기숙사에서 투신자살했습니다.

가족들이 생업을 중지하고, 억울하다,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저희들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

○**이미경 의원**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 취업규칙과 기숙사규칙이 영업비밀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기숙사규칙은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요, 취업규칙 중에는

일부 임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근거라든지 기준 같은 것이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리 천안지청 정보공개위원회에 참석한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기숙사 규칙 다 잘 보이는 곳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 취업규칙이 굉장히 방대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유족의 청구에 의해서 전부 공개는 하지 않고 해당 사항 일부 영업기밀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경 의원** 공개해야죠. 기숙사도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야죠. 기숙사 사정도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러한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기숙사에 일하는, 같은 곳에 일하는 사람들, 한 방에 일하는 사람들, 같이 교대시간 맞추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미경 의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었어요, 삼성에서. 특별근로감독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특별근로감독은 노사분규가 크게 발생했다든지 또는 임금 체불이 여러 가지 다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있다든지 상습 체불로 물의가 있다든지 이런 사업장에 한정이 되고 있고요, 이 건은 개별 노동자에 관한 건이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취업규칙 등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시간을 빨리 해서 수사하시고요, 불법이 있으면 검찰 송치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미경 의원** 삼성이라고 봐 주는 거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기소, 송치……

○**이미경 의원** 그런데 너무 오래 끌고 있어요, 이 문제가. 지금 3개월 이상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빠른 시일 내에 하여

튼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께 너무 많이 물어서 총리께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한 말씀……

○**이미경 의원** 아니요,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또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총리 자꾸 나오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나오십시오. 여러 차례 나오라마라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는 20대 꽃다운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보자만 120여 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벌써 47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모두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이 삼성의 업무로 인한 재해라 한다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게 업무하고 연관성이 아마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구심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흑백이 가려져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경 의원** 이 문제가 지금 3년 이상 끌고 있고 사망자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하고 있는데, 노동자 편에서 이 문제를 풀어도 저는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노동부가 오히려 삼성 변호사들하고 한 몸이 되어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사실이란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미경 의원** 그게 사실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저로서는 과연 우리나라 공직자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어떤 근거 없이 한쪽 편을 들어서 처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거는 뭐 공문을 보내서 서로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엄연한 사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삼성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코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료와 언론들이 나서서 더 그 문제

를 감싸고 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3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고 3개월이 지나도 장례 치르지 못하고 있고 이런 일입니다.

이러고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어떤 특정 기업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취급 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겠지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문제들이 공정히 다뤄지고 취급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설마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예, 한번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 또 민주당과 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산재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힘없는 노동자들이 산재 입증책임 하도록 돼 있고 기업은 영업비밀이라고 내놓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입증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법 바꾸고 제도 바뀌야 된다고 소위원회 만들자고 하는데 지금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삼성 편들고 있다’ 이런 말 듣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건 국회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산업재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작업을 정부에서도 추진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근로자들이 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미경 의원** 그러니까 정부도 빨리 해야지 되고 정부가 하는 일이 좀 더 제대로 되기 위해서 국회도 위원회 만들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국회 위원회를 한나라당이 못 하겠다, 이것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총리!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신재벌·대기업 정책으로 ‘기업프렌들리 정책이다’ 이렇게 대통령은 말씀하셨지요. 대기업의 재산은 50%나 늘어났지만 지금 노동자·서민들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고 있습니다.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노동현실이 40년 전 전태일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 부정의한 노동정책, 중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가 노동부로 돌아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 부천 원미갑 출신 임해규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원자력 발전 정책을 재검토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며, 셋째는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재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국민과 서민의 한숨과 땀과 눈물을 대변하는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교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초래한 재앙이라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원자력에 기초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 교과부는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는 원자력 진흥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제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로 최대한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원자력 안전에 대한 최대한 보장이 전제되는 하에서 원자력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해규 의원** 원자력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주

무장관이시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폐연료봉에서 공기 중에 노출됨으로 해서 방사능 누출이 있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임해규 의원** 우리나라 폐연료봉 상황을 보면 월성, 고리, 영광, 울진, 이 네 곳의 원전에서 무려 33만 6000다발이 저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준위 방폐장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내 수조나 또는 월성본부 부지 내에 있는 건식저장고에 임시로 지금 저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이면 이 폐연료 임시저장고조차도 딱 차게 됩니다.

아직 입지선정조차도 못 했는데요, 고준위 방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 원자력 폐연료봉에 대한 문제도 이제 지경부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과부 입장에서 일단 폐연료에 대한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번 일본의 사태를 보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잘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해규 의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사용후 핵폐기물, 즉 폐연료봉을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문제는 모든 나라가 다 아주 심각하게 각자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영구 처리시설을 가진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임해규 의원** 정두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독립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임해규 의원** 정부도 찬성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교과부장관 산하에 원전의 생산에 관한 것과 또 안전에 관한 것을 동시에 두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지금 독립적으로 하는 것인데, 아예 국회 산하에 두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선진국의 사

례를 보면 저희가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안은 미국 사례와 비슷하고요. 유럽의 경우에도 대부분 취지가 안전에 대한 규제는 진흥이나 활용과는 분리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진흥이나 활용과 관련된 부서와는 별도로 독립시키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에 두는 사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의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회에 두어야만 저는 국민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임해규 의원**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이 값이 싼 에너지라고 이렇게 인식이 그간 되어 왔기 때문에 원전을 한때 많이 짓고 했는데 그 위험성이 특히 체르노빌 사태로 밝혀지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을 제로화하겠다는 선언을 이미 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독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건이 생긴 뒤에……

○**임해규 의원** 체르노빌 사태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많은 나라들이 원전정책을 각기 그걸 확장하는 정책 또 중단하는 정책, 없애는 정책, 나라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임해규 의원** 독일은 2001년에 원전을 2022년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이미 수명을 다한 19개의 원전은 폐쇄를 했고요, 최근에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1980년도 이전에 지어진 원전 7개를 즉각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원전을 사용한 전력 생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첫 번째 조치로 이미 2007년에 사용연한이 끝났는데 노무현 정부 때 기한 연장을 한 바 있는 고리 1호기를 중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중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독일의 경우도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후에 오래된 원전에 대해서 가동을 중단하고 3개월 동안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을 일응은 다했던, 30년이 지난 고리 1호 원전에 대해서 지금 정부로서는 안전 점

검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까지 그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더 필요한 정밀 진단이 있다고 한다면 가동을 중단시키고 또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가지고, 말하자면 폐쇄 여부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제가 이 사건이 터진 뒤에 관계 전문가들을 불러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그겁니다. 말하자면 오래된 건물인데 완전히 골조나 이런 것을 전부 새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지금 한 20년 전에 지어진 그런 원전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안전하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전 점검이 행해지고 있으니까 철저히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결코 불안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해규 의원** 사용연한이 지난 원전이 새로 짓는 것 못지않게 혹은 그것보다도 더 안전하도록 보수했다고 하는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의 저 사태를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도 내년이면 설계에 따른 수명이 끝납니다. 월성 1호기 폐쇄 준비를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도 여하튼 지금 기본적으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과연 그 수명 연장하는 것이, 계속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결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절대 저희가 헛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임해규 의원** 저는 원자력을 통한 우리 발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반대하는 가장 큰 논거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원전이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한 30%를 좀 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중단하면 그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나 다른 선진국 보면 전체 에너지 소비하는 양에 대한 전망치를 지금 굉장히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수요 관리를 하는 쪽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우리나라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계속 에너지를 늘리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에너지 절감을 하고 줄이는 쪽으로?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이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하느냐 또 어떻게 절약해서 줄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부로서도 이것을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의원** 그 분야로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난방에 쓰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가 넘고요, 전력 중에서 난방에 소요하는 전력이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추기는 게 심야전기거든요. 원자력 발전을 해서 기저부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비하려고 심야전기를 싸게 파는 겁니다, 우리가.

심야전기 싸게 파는 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심야전기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된 이런 제도입니다.

○**임해규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택 난방을 전기로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다시 난방으로 쓸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낭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난방으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아, 예, 그런 취지의 질문이 시라면 저희가 특히 지금 전기 가(價) 또 에너지 사용량의 증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난방용으로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지난 겨울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장판이다 전기난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을 줄여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래서 전기 값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서 적어도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해규 의원**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재생 가능 에너지의 현재 생산도 거의 꼴찌이고요, 전망치

도 거의 풀찌거든요. 앞으로 100년 정도 안팎이면 화석연료도 거의 고갈되고 우라늄도 거의 고갈됩니다. 원전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지금 만들어 내고 그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것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올해 일몰제로 끝이 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계속 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보급을 하고 확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직은 기술개발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발전 차액을 보전을 해 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또 태양광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이런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른 제도적인 방법을 여하튼 시도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해규 의원 총리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 형성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 개발 의욕도 다 꺾습니다.

지금 하신다고 하는 게 결국은 한수원이나 이런 곳으로 하여금, 큰 곳으로 하여금 수력이나 조력 발전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저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도 신재생에너지의 국가 정책에 관해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어느 정도 경제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 기술 수준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빨리 확대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임해규 의원 예.

총리께서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이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임해규 의원 그곳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저는 진흥종합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원자력 관리 그리고 통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이곳에는 원자력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즉, 반핵적인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얼마 전에 원자력위원회를 했었는데 각계의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그들의 성향이 어느 쪽인지 하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반핵의 어떤 사고를 가진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좀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의향이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당연히 국가의 중요한 원자력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취합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해규 의원 총리님, 이제 공급 증가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 그리고 과학기술 맹신주의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학기술 맹신주의 대신에 과학기술 인문학의 관점에서 좀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과학을 이제 재조명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체르노빌 사태나 후쿠시마가 인류에게 던지는 그런 교훈이요, 각성하라고 지금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는 임 의원님 지적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되고 또 이렇다 할 에너지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있어서 결코 지금까지 해 온 원자력 정책을 하루아침에 폐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서 안전성 확보가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그 전제하에서 원자력 정책은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발전 방향 추이를 봐 가면서 되도록이면 원전도 그런 각도에서 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현 시점에서 정책을 포기하거나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해규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든든학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대학가에는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이 일고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임해규 의원**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든든학자금 대출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일단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대학 공부는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지에 따라서 추진이 됐고요.

큰 장점은 취업 후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등록금을 대출해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이 안 되는 기간 중에 사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해소가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취업 후에 상환하는 그런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에도 대학 공부가 가능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의원** 그런데 불만이 많습니다.

학점 제한하고 소득 제한이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임해규 의원** 대출을 받는 자격조건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소득 제한은 사실은 상한입니다. 그래서 8분위, 9분위, 10분위,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학생들은 제외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임해규 의원** 그런데 이 대출제도가 부모의 소득 여부가 아니라 본인이 나중에 갚자고 하는 취지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만 이제 소득 제한을 다 풀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소요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소득층……

○**임해규 의원** 지금 너무 안 빌려가서 문제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당초 예상보다 빌

려간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득 제한을 풀게 되면 재정소요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해규 의원** 저는 더 소요가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이 빌려가라고 만든 제도니까요.

그리고 이자율이 높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장학재단 채권으로 하니까 지금 5% 이상 대의 이자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4.9%입니다.

○**임해규 의원** 4.9%?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임해규 의원** 그런데 국채로 전환하면 3%대로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도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의 그 취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교과부로서도 그것을 추진해 봤습니다만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국채로 발행할 경우에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단기채권으로만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례에서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계속 국채로 발행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처 협의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해규 의원** 장관께서는 국채로 전환하는 데 찬성하시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는 그 찬성 입장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임해규 의원** 그리고 이자가 지금 복리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임해규 의원** 그것을 단리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단리가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취업 전까지는 이자율 계산할 때 단리이자 계산이 되고요, 상환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복리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다른 대출사업에 견주어 보았을 때 단리로 하는 것이 너무 무리가 있다 하는 경제부처의 지적입니다.

○**임해규 의원** 그런데 그 생각이 든든학자금을 금융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인재에 대한 투자이고 또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공적 성격을 감안하면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컨대 정부가 1000억 이상 매년 지출을 감수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국가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우리 교과부 입장만 무조건 관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의원** 교과부장관님은 교과부 입장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임해규 의원** 군 복무 때도 지금 이자를 받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임해규 의원** 이것은 심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니겠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의원님 견해에 전적 공감하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올해라도 의원님의 그런 취지에 따라서 군 복무에 이자를 부담하는 부분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꼭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뉴타운 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또 개발이익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로 인해서 전국에서 70여 곳에서 지금 지구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나빠져서 지금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갈려서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재개발 방식이 지역주민들의 생활공동체를 지금 파괴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가 있던 곳의 도시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곳에 아파트단지를 그냥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 노후연금식으로 집 한 채 사놓고 임대소득 받고 있는 그런 노부부들의 생계가 지금 막연해지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조합원 반대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되거든요.

총리님은 지금 현재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

게 보고 계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요컨대 종전과 달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성이 없어진 것이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라도 종래와 같이 전면 철거하고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능사인가, 어떻게 하면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고 하는 노력이 장소에 따라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고 더 인간친화적인 그런 개발방식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여하튼 좀 다양한 방식의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의원** 오늘 저한테 주신 답변 중에서 지금 하신 답변이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2000년대 이전까지 주택이 투자와 투기의 수단으로 되어서 어떤 주거 공개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도 자기가 거기에 재정착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아시면서도 5000만 원, 1억, 그런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냥 재개발에 동의하고 찬성하는 이런 흐름으로부터 이제 누구도 이런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 점에서 그간에 정부와 또 정치권이…… 국회 마찬가지로 법을 다 여기서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되어 온…… 도정법과 도축법입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이런 주택 재개발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 단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총리님의 방금 하신 답변이 그와 비슷한 맥락의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제가 총리 취임한 후에 지방을 다니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도시재개발 문제에 관한 논의도 하고……

또 가령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데에 일정한 높은 지역이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지만 그 주거환경을 잘 개선해서 그야말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참 아름다운 곳에 전망이 좋게 참 멋지게 살 수 있는 생활여건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문제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정입니다. 재정이니까 좀더 그런 측면에 우리가 착

안을 해서 필요한 재정을 마련을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도 장소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방면으로 여하튼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지금 문제를,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임해규 의원** 서울 강북에 있는 뉴타운 재개발과는 또 경기도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구는 부천인데요. 그곳의 또 주택 재개발은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것도 유념해 보셔야 되는데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임해규 의원** 경기도의 많은 지역은 소위 예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80년대식의 주택 재개발사업을 이미 한 곳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나 조그마한 공원이 그래도 잘 정비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기반시설, 정비시설이 그나마 갖춰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다시 뉴타운 사업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큰 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업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조건인데, 저는 총리님께서 ‘정부가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 점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제발 좀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 서민들의 호주머니로부터 돈을 빼서 기부채납이라는 형식으로, 오히려 정부가 그야말로 세금으로 하지 않고 그 주민들의 돈으로 그 지역의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생각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형식의 재개발·재건축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공의 재원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재개발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걸 주민의 부담으로 하지 말자 하는 취지의 말씀인데 또 그렇게 하면서도 기왕에 있던 기반시설, 없어지게 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걸 무상으로 또 양해하도록 양도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부담하는 그 부분만큼은 용적률을 더 반영해 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재개발사업이 단순히 사익적인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하는 그런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 같은 것들을 주민들의 부담이 최

소화 되도록 하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의원** 재개발사업은 정부가 지구 지정을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구 지정을 하는 그 행위가 따라서 이 재개발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구 지정할 때 솔직히 말하면 주민들은 자기의 재산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임해규 의원** 그런데도 일단 정부가 지정을 함으로써 해서 사업이 시작되고 그다음에는 시공사나 또는 정비 용역업체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성이 나빠졌는데도 사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구조도 그렇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임해규 의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 조합원들이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또 분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한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진원이 다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요건을 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좋을 때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지금 사업성이 나빠질 때에는 각자 의견들이 더 강력하게 표출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서 이제……

○**임해규 의원** 그런데요. 그 사업을 일단 지구 지정을 하면 사업이 앞으로 즉 진행되도록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래서 오늘……

○**임해규 의원** 사업이 어려워지면 다시 되돌아가기는 어렵게끔 법이 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래서 가령 지구 지정 해제나 조합을 해체하는 그런 쪽으로도, 말하자

면 퇴로를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임해규 의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관심을 갖고……

○**임해규 의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은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임해규 의원** 무엇보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비용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사업을 중단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정부가 과연…… 정부의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그 사업 내용을 바꾸자든지 또 다른 목적으로 조합을 해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는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그것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과연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또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한 다른 여러 경우에 비추어서 비교해 보면 혼란이 있을 여지가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해규 의원** 신중하지만 검토는 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글썄요, 물론 결정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다면 검토를 해야 되지만……

○**임해규 의원** 그런데 지구 지정을 처음에 할 때 사실 정부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때 말하는 정부는 주로 지방정부입니다만 정부가 주민들 다 불러 놓고 전문가 모셔다가 이 사업 하면, 현 집 주면 새 집 준다고 다 얘기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나빠지니까 ‘나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직한 정부는 아니라고 보아야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지방정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쪽으로 유도하는 측면은 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정한 권고도 하고 또 이렇게 지원도 하는 것이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 생겨 가지고 손해

가 생겼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지방정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공적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적으로 정부 내지는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총리님, 현재 도정법도 법리상으로 문제가 참 많은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임해규 의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원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리고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그간의 많은 정책과 이런 패러다임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한 번쯤은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저는 뉴타운 사업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공동체를 부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온전하게 질적으로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는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임해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갑 출신의 민주당 양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이라는 747 장밋빛 공약으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은 물가대란과 전세대란으로 고통과 눈물과 한숨의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세종시 원안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라는 대국민 약속으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 거짓말 공약으로 당선되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사기 쳐서 잡은 정권 스스로 내

놓아야 한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고, 심지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한 공약을 뒤집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바람에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대통령의 신뢰는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가 추락한 지금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의 혼돈 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지난 3월 28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인사이트코리아마케팅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 누출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94.1%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했고, 정부 발표대로 '안전하다'는 답은 5.9%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정부 불신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는데, 이 보도를 보시고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마 정부 불신보다도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대재앙이 일어난 직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거지 정부의 발표를 단순히 불신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승조 의원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결과에 대해서 바로 국민이 답한 것은 94% 정도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이 국민들의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황식 전문가적인 식견이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안전사고가 생겼고……

○양승조 의원 아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의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의원 국민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국민들이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불신을 하는 것도……

○양승조 의원 저는 그 불신의 진원지가 대통령

이고, 불신의 가장 커다란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자꾸 거짓말하는데 국민이 대통령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대통령의 거짓말이다, 말 뒤집기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지적도 비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이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그 공약은요 안 지킬 수 있는 게 있고 못 지킬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께서 20여 차례 약속한 세종시 원안을 헌신짝 버리듯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허언을 하셨는지 동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좌담방송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에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선공약집 34쪽에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거짓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대선공약 홍보영상에도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과학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라며 '세계적 기업과 세계적 과학이 만나야 합니다. 이명박이 도전합니다'라는 2007년 대전·충청 공약 홍보영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007년 8월 8일 대전·충남 합동 연설회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과학과 세계적인 기업이 만나야 한다'라며 '저 이명박이 이곳에 만들겠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어서 2007년 9월 12일 목원대학교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는 '제가 구상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는 행정도시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며 '짧게 걸리면 3년 안에 할 수 있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여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입지 선정도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인 2007년 11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학벨트 지도와 그림들을 총동원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여러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만 이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저는 한 번 얘기해도 약속을 지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약집에 분명히 명시되었고, 보신 바와 같이 수차례 공언한 것을 이제 와서 백지화하려 한다면 대통령의 어떤 말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2월 1일 좌담방송에서 ‘선거 때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하여 관심이 많았겠지요. 하하하’라면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을 오직 표만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자백하는, 전혀 대통령답지 못한 태도를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충청인을 비웃는 듯한 그날의 대통령 웃음은 우리 충청인의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쏟아 부었습니다.

총리, 대통령의 이런 말이 대통령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벨트 공약집에 등재되어 있는 여부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착오하셨는지 모르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이 정해졌으니까 그 요건·절차에 따라서 행해진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부담이 되신 상황을, 결국은 법에 정한 요건·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제도를 공약부터 내세웠던 것에 대해서 조금 본인으로서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신 말씀으로 저는 선해(善解)를 합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께서 선의로 해석하시지만 노무현 정부 때 신행정수도 건설 약속 때는 법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또 후속대책 법률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도 충청권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선거 때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해서 관심이 많았겠다 하면서 백지화 발언을 하셨냐는 겁니다.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으면 그 이유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또 양해를 구해야 하며 해당 지역 국민에게는 죄송하다고 백배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벨트법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입지가 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요

건·절차에 따라서 행해진다는 것이 입장이고 만약 충청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양승조 의원 이미 대통령께서는 간담회에서 백지화 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백지화보다도 그 요건·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해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직 충청권에 입지가 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 점에 대해서……

○양승조 의원 입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다. 왜 충청권 공약을 수차례 공언하시고 공약집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한마디로 자르듯이 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공약은 비록 그렇게 했지만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검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공약했던 대로가 아닌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절차를 거치는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요, 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약을 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대통령께서 공언하시고 공약집에 한 대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법률에 명시했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는 대통령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벨트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2008년에 치러진 18대 총선공약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집, 대전·충남·충북 공약집 64쪽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7·28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천안 유세에서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7월 21일 천안의 성환읍 5일장에서 안상수 대표께서 하신 연설인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있다. 집권당후보

만이 이러한 일을 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집권 당후보를 뽑아 주시면 저희들이 화끈하게 밀어서 우리 천안시를 확 바꾸어 드리겠다'고 말했고 7월 27일 천안에 또 다시 '김호연 후보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공약, 그것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약속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김호연 후보가 공약한 과학벨트 유치를 약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선거에서 천안 서북구 주민들은 김호연 후보를 뽑아 줬습니다. 안상수 대표뿐만 아니라 나경원 최고위원님, 원희룡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한결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10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님과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의 어떠한 대선공약, 어떠한 총선공약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공약을 만들고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 이런 것들이 이번 일련의 사태에서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는 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명박 정부에서 과학벨트의 최적지는 세종시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보도자료를 검토를 해 봤는데 그때 세종시 발전방안을 추진할 때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적합한 여러 부지 중의 하나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승조 의원** 화면 한번 보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리고 타 지역과 입지를 비교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승조 의원** 장관님,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2010년 1월 11일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국제과학비즈

니스벨트 입지 - 세종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적합하다고 밝혔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세 가지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양승조 의원** 첫째 세종시는 도시 기반계획이 완성되어 있어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가칭 국제과학대학원 건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음, 둘째 인근의 대덕연구원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기업, 대학들이 집적되어 있어서 연계 발전시키기 좋으며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가능함, 셋째 정부에서 2시간 내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전국 주요 도시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연계 발전이 우수함,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양승조 의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 충청권이 최적지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과학벨트위원회에서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때 입지 선정 요건이 그 당시 발표했던 세 가지 요건보다 좀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요건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지금 입지 선정으로 들어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장관, 화면 한번 보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영상자료를 보며)

○**양승조 의원** 경향신문이 2월 15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매체인 대덕넷은 2월 9일~11일 전국의 과학 분야 종사자 1144명을 대상으로 과학벨트 입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88.7%가 인프라와 효율성 측면에서 과학벨트의 입지는 세종시 등 충청권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고 충청권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과학계 종사자 66.3%도 과학벨트 입지로 세종시 등 충청권을 꼽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래서 저희 과학벨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과학벨트법에 따라서 입지 선정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 또 말씀하신 지금 위원회 구성원들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합리

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승조 의원 장관, 과학벨트는 과학계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양승조 의원 총리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주 수요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영남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는 등 국책사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물론입니다.

○양승조 의원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데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까.

말씀대로 총리께서도 과학벨트야말로 당사자인 과학계 입장을 가장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양승조 의원 그런데 과학자들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과학벨트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분산 배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

○양승조 의원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까?

○양승조 의원 예.

또 뿐만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에도 지난 2월 10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과학벨트 분산 배치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역 민심 수습용 과학벨트 쪼개기는 나라 망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나라의 미래가 달린 국책사업을 특정 지역의 민심 수습용이나 지역간 나눠 먹기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가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다. 과학벨트는 과학 논리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양승조 의원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 중앙일보도 비슷한 논지의 사설을 실은 적 있습니다. 분산 배치야말로 전문가인 과학자들의 의견도 깡그리 무시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법의 취지 그리고 벨트의 취지가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 과학기술 발전 진흥

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 여하튼 입지가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바로 과학인들이 중심이 돼 있는 벨트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결정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 또 과학벨트 공약을 내세워서 충북·대전·충남에서 1등으로 득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세종시를 원안을 추진하지 않고 수정안을 내겠다.’,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겠다.’ 그런 공약이 있을 때도 1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저로서는……

○양승조 의원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명백한 선거 사기입니다.

우리 충청인들은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이어서 다시 한번 과학벨트공약을 과기한다면 우리 충청인은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께 반드시 전달해 주십시오.

총리께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유류 피해가 발생한 지 얼마나 됐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한 4~5년 된 걸로……

○양승조 의원 3년이 지났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양승조 의원 2007년 12월 7일 발생했고 지금 4월이니깐 한 3년 4개월쯤 됐는데 총리님 산하에 그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그 특별위원회의 특별대책위원회가 몇 번 개최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취임한 뒤에 지난번에 그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양승조 의원 저는 정부의 이런 능장 대응과 이런 안일한 자세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3년 4개월 동안 딱 두 번만 엽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보상에 관한 절차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류 관련 국제기금에서 보상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특별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보상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제유류기금에서 보상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현실적으로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승조 의원 총리님, 시간상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양승조 의원 피해 주민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지요? 한 12만 7000명 정도?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양승조 의원 피해 청구액만 해도 한 2조 4000억 정도입니다.

IOPC, 즉 국제기금의 사정률은 현재 사정률이 43.5%, 인정률이 20.4%, 인정 금액이 약 137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IOPC, 소위 국제기금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나 요건이 나름대로 엄격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액수가 나온 거고 절차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 이 문제를 피해 주민과 IOPC의 관계라고만 보면 정말 안 됩니다.

왜 그러면 법을 만들고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법 자체가 IOPC에서 배상해주는 범위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양승조 의원 피해 주민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과 한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 빨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저희가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충남 도지사도 나오셨고 또 태안 군수도 나오시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전향적으로 취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IOPC 결과 등을 참고를 해 가면서 이러한 피해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각

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조 의원 총리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문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수치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양승조 의원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양승조 의원 2009년 12월 기준으로 자살자가 1만 5413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8.4명입니다. 하루 평균 42명, 34분마다 1명씩 자살하는 꼴인데 OECD 회원국 평균치인 11.2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양승조 의원 또 이혼율도 역시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양승조 의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12명으로 차량 1만 대당 2.8명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양승조 의원 OECD 평균의 2배 정도에 달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양승조 의원 또 OECD에서 발간한 '2010년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볼 때 OECD 국가 중에서 31등 정도이고요. 2011년 OECD가 조사한 국가별 행복지수는 140개 국가 중 103위에 해당합니다.

총리, 우리 사회에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문제가 있다는……

○양승조 의원 이렇게 이혼율,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자 수, 행복지수……

○국무총리 김황식 예, 우리 사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지적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우리 사회가, 국가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이 모두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생긴 것,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가 중심이 되고 또 국민들과 협력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의원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양승조 의원 총리님, 지금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의원 효문화라든가 공경문화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효문화, 효사상의 증진에 필요하다면 뭐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효문화를 증진시키는 데 과연 얼마큼 도움이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어머니날을 저희들이 휴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버이날로 바꾸면서 휴일이 아닌 것으로 뒀습니다마는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의원 예,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그러한 귀한 정신을 우리 후세들이 잘 이어받기 위한 그런 기념……

○양승조 의원 독립정신과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의원 그런 면에서 볼 때 천안까지 전철이 연장됐는데 많은 사람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독립기념관까지의 전철노선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 독립기념관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그런 선상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의원 예, 그 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양승조 의원 예, 됐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양승조 의원 장관님, 우리나라 경찰관 일인당 담당 인구 수가 500명 정도라고 그러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양승조 의원 다른 미국이라든가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 정도에 불과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조금, 그건 좀 차이가……

미국이 350, 영국이 380.

○양승조 의원 그렇습니다.

354명, 영국이 380명, 독일 301명, 프랑스 300명인데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찰관 일인당 담당 인구 수가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상대적으로는 뭐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이제 전·의경들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좀……

○양승조 의원 그것까지 감안해도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감안하면 404명이 됩니다.

그래서……

○양승조 의원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아무리 복지가 잘 실현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더라도 치안이 불안해서는 저는 진정한 복지의 실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렇습니다.

○양승조 의원 그런 면에서 우리 경찰관 일인당 담당 인구 수를 줄일 수 있는 그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소방공무원 문제인데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양승조 의원 지금 면 단위 파출소 같은 경우는 소방관이 전부 철수해서 소방차만 있고 소방공무원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양승조 의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잘 알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장관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드리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양승조 의원 우리 기초노령연금 70%에서 수급자 수를 80%로 늘리는 방안하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양승조 의원 수급의 확대 또 어르신들 교통수당 지급, 노인 의치 틀니의 건강보험화 또 대한노인회 지원법에 대한 시행령 마련 또 경로당·노인대학 지원법 마련,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릴 테니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승조 의원 예, 주십시오.
간단히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지금 기초노령연금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연금지급액이라든지 대상 확대에 관한 문제는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을 할 당시에 그 법 부칙에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특위를 마련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2월 국회에 구성된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를 좀 이어가는 것을 우리 정부는 지켜보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하고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09년에서 13년까지 보장성 확대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요. 당초 계획대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지금 2012년에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해서 연구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부담률 같은 건 지금은 75세 이상, 50% 부담률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예,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4년 전인 2007년 1월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그건 지도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게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부의장 정의화 양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갑 출신의 정양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서울 강북갑 출신 정양석 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만이 56조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고 또 10대 그룹은 자본금의 12배가 넘는 이익금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는 그 성장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온돌방의 아랫목의 따스한 온기가 윗목에 전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IMF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물가에 대해서 통제불능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통제불능 상태보다 예측불능에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황식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양석 의원 임기 4년차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레임덕은 없다 또 임기 말까지 일을 계속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수치는 높지만 또 일반 국민들의 체감 평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책사업을 두고 공약과 소신 사이에서 소신을 택한 대통령의 용기는 좋았지만 지역 간, 정당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또 LH 공사 이전 문제도 이제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제 집권 4년차, 임기 후반의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이런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정당 간의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고 또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국정 전반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선 금년도에 물가안정 또 서민생활의 안정, 일자리 창출 또 경기 지속적인 회복,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과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최근에 국책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대립, 갈등이 증폭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법과 원칙만의 정부가 아니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정말 설득하고 또 이해를 시키는 그런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양석 의원 총리님의 국회 답변을 들으면 국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또 이해도가 높아서 저희들이 신뢰감이 갑니다만 과연 총리님께서 총리님의 그런 소신과 철학을 의사결정과정에서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국민들은 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소신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양석 의원 지난 3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의 중심방향은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또 친서민 중도실용 또 공정사회·동반성장, 이렇게 변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이런 정책기조 변화를 보면 과연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또 정체성은 무엇인가, 또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와 여당의 위기를 '배부른 보수의 위기다' 하는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임기 초에 했어야 할 일들을 이제 임기 말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께서 '기조가 그동안에 이렇게 변화해 왔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넓혀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 중산층·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기업 프렌들리

하고 친서민하고 반드시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이런 개념이나 정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또 경제적인 위기, 어려움도 닥치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업을 왕성하게 활동시키고 또 거기에서 생기는 과실을 중산층·서민들에게 나누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점이 강조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산층, 친서민을 위해서 보다 더 중점적인 정책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여하튼 그러한 정책 의지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한 사회 여론이라든지 또 현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강조하고 한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배척시키고 서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전체가 어우러져야 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양석 의원 맞습니다. 그게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성장을 위해서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정책의 혜택이 대기업에 게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환율 정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 물가를 올려서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또 SSM까지 진출해서 전통 시장에서 서민들의 영역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 자녀가 대주주인 비상장회사는 50% 정도가 내부거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배당금을 받고 편법으로 회사를 또 물려 받고 있습니다.

총리, 과연 이게, 이 정책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목표입니까? 총리께서는 설명하셨지만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민이 상생활 수 있는 그런 정책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동안에 많이 논의됐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그동안에 그런 노력도 있었습니다. 납품가를 대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깎는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합에 협의 신청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각종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로는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상생활 수 있는지에 대해

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거고요.

그리고 SSM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상생법, 유통법을 했는데 그러나 아직도 시장 현실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더 챙겨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대기업이 일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서 또 편법적인 증여, 상속을 하는 그런 문제 등이 있는데 이것은 공정사회의 관점에서 그리고 공정거래의 관점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강력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지금 드러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결코 눈감고 있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다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양석 의원 총리의 실천 의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임기 후반을 마무리할 선발투수를 바꾸고 마무리 투수를 내세우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미국발 경제위기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G20 의장국으로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 정책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정책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물가 관리는 실패했습니다.

총리, 이 시점에서 임기 후반을 마무리할 전면적인 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고통받는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개각을 통해서 국정 쇄신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열심히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 제의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총리께서는 지난 연말 서울의 달동네인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양석 의원 그 재개발지역에서 집주인들은 이사했지만 세입자들만 남아 있는 상황을 보고 개발정책을 보셨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풀어 가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노원구에 방문할 때는, 아까 임해규 의원님 질문에 답할 때, 달동네라고 그래서 달동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머릿속에 그려 보면서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재개발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공가가 있고 세입자들이 많이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로서 원주민이나 또 세입자들이 여하튼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정양석 의원 정부에서는 70년대 이래 서울의 도심 인구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구 유발시설을 강남으로 이전토록 집중투자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강남과 강북 간의 그런 불균형이 초래되고 지금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살리기와 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살리기와 주택 공급은 보완하기도 하지만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 살리기가 우선되면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이 늦어집니다.

강북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받고 많은 불편을 당해 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뉴타운 지역이 주민들이 희망한다면 취소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지만 강북지역의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니 뭐니 해도 주민 부담금이 커서 원주민 정착률이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민 부담금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이북 지역에 있어서는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로 인해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논의됐지만 공공시설 부담률

입니다. 공공시설 부담률을 개발자에게,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서 주민 부담금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세 번째는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그런 부담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의 입주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도시도 살려야 되겠고 주택 공급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이런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말씀으로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규제를 합리화하고 또 공공부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까. 공공부문이 재정적으로 지원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들이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재정 여건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반시설 같은 것들은 공공부문에서 좀 부담해 주면 상당히 지역주민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양석 의원 수십 년째 개발이 늦어져서 재산권 행사 못 하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한 그런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규제의 크기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규제 근거와 법적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지역의 고도 제한과 용적률은 국토법과 건축법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서울시 조례에서는 모법에 비해서 훨씬 축소된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도지구 제한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닌 고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도시계획 심의절차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나름대로 법적 근거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총리께서는 작년 ‘영암 F1대회’가 보신 적 있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양석 의원 금년에도 또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정부가 될 도와줘야 되는지, 어떤 소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게 국가 위상을 높이고 또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가져오고 또 특히 그 지역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게 이제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 여건이 불비하고 경제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정한 지원을 통해서 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양석 의원 총리께서 다녀오셨고 또 관심 가지고 계신 만큼 추가 공사비와 대회 운영비 그리고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 문제도 지금 총리실에서 논의를 해서, 간척지 양도·양수에 관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서로 타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양석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대기업 총수 자녀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과 관련해서 공정사회에 어긋난다고 지난 2월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렇습니다.

○정양석 의원 후속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지난 3월 11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회사 재산을 빼돌리거나 또는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억제하거나 금지하는 자기거래 제한 확대랄지 그다음에 회사기회 유용금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지난 3월 11일 날 통과됐습니다.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예정입니다.

○정양석 의원 국세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 체납액 규모가 약 22조 2000억, 금년 예산의 7.2% 규모입니다. 또 10억 이상인 고액 체납자도 200명이 넘습니다. 체납이 늘고 있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렇겠지만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탈세법에 대해서 적발 건수가 저조합니다. 물론 국세청이 하지만. 또 조세범죄자를 고발해도 재판에 기소되는 경우가 약 10~13%밖에 안 됩니다.

니다. 또 기소가 되어서 실행 선고를 받는 비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60%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장관님, 공정사회 또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서 탈세자, 조세범죄에 대해서 좀 강력한 수사 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고발사건 중에 불기소가 많은 이유는 지금 고발사건의 상당수는 무자료거래 사항 부분인데요, 그 사람들이 도망가고 없어서 기소 중지하는 처분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행 비율은 저희들이 통계를 못 내 보았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검찰에서도 그 점을 유념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국세청과 협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또 실행 선고비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처벌수준을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최고형이지만 미국이나 독일·일본에서는 5년 이하,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7년에서 10년 이하로 형량이 우리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저희 법률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억 이상이면 무기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처벌형량도 높이고 구속비율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내 자치구 간 또 자치구 내에서 학교 간 또 부모의 소득에 따른, 빈부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를 한번 새삼스럽게 제기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교육청과 성북교육청의 학업성취도 차이는 이미 약 23%가 넘습니다.

자치구 관내에서도 강북구에 있는 11개 중학교에 대한 학력평가를 해 봤더니 국·영·수에 있어서 제일 높은 학교하고 제일 낮은 학교가 약 30%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

니 학부모님들이 학력이 높은 학교로 전학을 시키려고 해서 과밀학급이 생기고 있고 상대적으로 과소학급도 생기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 문제는 새삼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장관님, 이런 격차—지역 간 격차, 지역 내 학교 격차, 소득 격차에 따른 학력 격차—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정양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력 격차 해소는 이 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가난하든 부자든 또 어느 지역에 살든 정말 골고루 아이들의 역량이 최대한 뻗어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보여 주신 그 표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국 단위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특히 학업성취도가 미달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그 아이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력 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해서 미달 비율을 줄여 나가고 있고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저희가 처음에 2008년도에 조사했을 때 7.2%에서 2010년 3.7%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유·초등 단계에서 방과 후 학교 활성화라든지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고교 단계에서는 자율형 공립고, 지금 강북에도 미양고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들이 지정되고 있고요, 또 농어촌 지역에는 기숙형 고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교육 절감 정책입니다.

사교육이 기본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교육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학력 격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양석 의원** 고맙습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다릅니다.

강북구, 한강 이북에 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되도록이면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강남으로 전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한강 이북에 살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그나마 여건이 더 좋은 예를 들면

노원구라든가 하는 곳으로 전학시키기를 희망하고 있고, 전학을 위해서 위장전입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북구 관내의 학교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좀 방문하시고 이런 격차 해소에 중앙정부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관련해서 이런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삼각산중학교가 있습니다. 학업성취도는 상위권에 있는 학교입니다. 인근에 아파트가 1만 1291세대가 밀집되어 있고, 또 금년 11월에 1370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생 수요를 판단을 잘못해서 학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평균 8명이 많은 과밀학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도보로 20분 거리에, 또 버스로 20~30분 거리에 다른 학교가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학교 증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학교 간 교육 격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학급당, 삼각산중학교의 경우에는 42.1명으로 지금 과밀학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지역에 그런 과밀학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과밀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장관님, 초·중학교 혹시 방문해서 화장실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한 번 가 본 적도 있습니다.

○**정양석 의원**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많이 개선되었지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좀 열악한 곳도 아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양석 의원** 화장실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15년인가요

.....

○**정양석 의원** 15년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해서 21년으로 화장실 내구연한을 늘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21년이 된 화장실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속도로 화장실이나 공공화장실은 비데까지 설치해 가면서 개선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화장실은 21년이 되어야 고쳐 준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실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불일을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꼭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시·도 교육청별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중에 교육환경개선비에서 이런, 특히 학교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수주기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화장실 보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00억, 약 30%가 깎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양석 의원**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정양석 의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서울시교육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정양석 의원** 진수희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저는 자활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0만 명 정도의 기초생활수급 중지자가 생기고 계신 것 아시지요?

그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지사유를 보면 ‘가구원 변동’ ‘취업’ ‘사망’ ‘자활 자립’ ‘자녀 성장’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다리 복지’를 구현하는 자활·자립에 의한

탈수급률이 7.3%, 3.6%밖에 안 됩니다. 지극히 저조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정양석 의원 그 배경을 보았더니 근로능력이 나 본인의 희망을 감안해야 되고, 또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0.6%, 그래서 1인당 연간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한 탈수급 비율이 6~9%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희망사다리를 강화하고, 탈빈곤 성과에 따라서 자활센터의 책임성도 강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또 지원 방안, 마련할 생각 없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활사업은 사실은 이 정부가 추진하는, 또 이 정부의 복지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능동적 복지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은 일자리를 통해서 탈수급하도록 자활·자립 정책에 역점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활 지원대상이 원래 지난해까지는 4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것을 19만 명으로 내년까지는 대폭 확대해서, 타깃 집단을 더 확대해서 자활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자활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률은 한 9% 정도가, 앞으로 계속 올려 나갈 것이고요, 취업률을 41%까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희망리본프로젝트이라든지 또 개인들이 수급자이지만 일을 통해서, 취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을 올려서 자신의 희망키움통장이라는 통장에 저축을 할 경우 자신이 저축한 만큼의 민간 매칭금을 지원을 하고요, 또 거기에 정부 지원금까지 없어서 한 2년, 3년까지 그것을 적립을 하면 최대한 17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종잣돈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양석 의원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건수 중에 대개 '적합'으로 되는 비율이 약 67% 정도 됩니다. 안 되는 사유가 제일 많은

게 사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03만 명 정도가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사에 의하면 '나 홀로 사는 세대' 또 '자녀와 함께 살지 않겠다'는 독거 세대가 늘고 있고 그것이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이 기준도 좀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130%에서 150% 정도로 완화할 계획 없으십니까? 그럴 경우 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우리 사통망, 소위 e-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망에는 이런 통계를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만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수급 빈곤층 103만 명, 그분들이 빈곤에 가장 어려운 사각지대라고 정부도 보고 있고요. 그분들을 어떻게든 우선 돌볼 수 있는 차상위계층으로 우리가 대상을 정해 놓고 이제 좀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다소 엄격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현재 최저생계비 한 130%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과 부양의무자 가족의 수입을 합해서 최저생계비 130%까지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다소 완화해서 한 150%까지 완화하는 것을 지금 기획재정부 쪽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150%까지 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약 5만 명가량을 신규로 우리가 더 보호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럴 경우 추가재원은 한 1700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양석 의원 사실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가 많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정양석 의원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건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주시면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정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주 서귀포 출신의 존경하는 민주당 김재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민주당 김재운입니다.
이명박 정부 3년은 우리 국민에게는 고통과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서민경제는 무너졌고 민주주의는 짓밟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의 꿈은 아득히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가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 하나만은 제대로 살릴 것이라며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3년, 어떻습니까? 치솟는 물가와 전세대란으로 서민의 허리는 휠대로 휘었고 구제역과 빛더미, 무분별한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어민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고, 대학 등록금과 취업난으로 젊은이들은 희망을 놓아 버린 지 오래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차별로 잡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 참여정부를 3무 정권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무능 정권, 무책임 정권, 무치 정권, 3무 정권 몰아내고 국민 성공시대를 열자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가 했던 그 말 그대로 이명박 정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없고 책임감 없고 염치없는 3무 정권,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고 국민 희망의 시대를, 서민 희망의 시대를 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제 3무 정권을 넘어서서 4무

정권, 5무 정권, 6무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3년은 국민 성공시대가 아니라 국민 고통시대, 국민 절망시대였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표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도표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명박 정부 3년을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3년의 실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후보께서는 ‘7% 성장으로 양극화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3년 지난 후 소득 5분위 배율 악화됐습니다. 상대적 빈곤율 악화됐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 2004년 이후 최저입니다. 실질임금 상승률—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입니다—조사 국가 27개국의 최하위입니다. 이런 빈부격차 확대, 대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부도 우리 경제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경제성장의 온기가 서민들이나 중산층에 골고루 아직 전파되지 못한 점과 또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반성장이랄까 서민물가 안정, 그밖에 일자리 창출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득분배지표 지니계수도 근자에 들어와서는 좀 개선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망정 최소한도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부채 보지요.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그렇게 공격했던 것이 바로 국가부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국가채무 300조 원 유지하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31% 증가, 3년 동안 100조 원이 늘었어요. 이러다가 국가 곳간 거덜 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08년 그야말로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의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래도 근자에 경제가 회복되면서 국가부채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또 2013년, 14년대에서는 균형재정을 이루

고 또 국가채무율도 GDP의 30% 초반 수준을 목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 그렇게 하면 대통령 누구나 다 합니다. 공약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리고 지방재정 더욱더 심합니다. 무려 지방 부채가 94%나 증가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김재윤 의원**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경제위기……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김재윤 의원**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다 해도 문제 해결의 시작은 내부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재윤 의원**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2008년이라는 전대미문의, 온 세계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었다……

○**김재윤 의원** 잘 극복한 나라 많습니다.

가계부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매년 늘어나는 이 부채, 무려 795조 원이에요. 이것 이러다가 가계부채 때문에 나라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DTI 규제 완화로 원상회복을 시켰고 또 여러 가지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고정금리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윤 의원**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 의원** 이것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시지요.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입니다.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하겠다’…… 절감됐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

○**김재윤 의원** 절감됐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공약입니다.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하겠다……

○**국무총리 김황식** 최근에 전셋값 앙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의 침체 이런 상황들이 모두 관여돼 가지고 그야말로 보급자리주택이라든지 또 LH공사에 의한 공공주택의 공급 등 여러 가지 차질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재윤 의원** 총리님, 핑계 없는 무덤 없는 겁니다.

다음 대선공약 보시지요.

‘에너지비(유류세) 인하하겠다’…… 유류세 10% 인하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김재윤 의원** 이명박 대통령 공약이에요.

○**국무총리 김황식** 저희가 국제유가 상황 등 또 세수에 미치는 영향 또 에너지 절약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윤 의원** ‘통신비 20% 이상 인하하겠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입니다. 통신비 20% 인하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통신비의 경우는 근자에 들어와서 스마트폰이 개발 보급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작은 PC,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종래의 통신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상황,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받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종래와 같이 통신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통신비가 가계 부담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걸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 공약은 표 받기 위해서만 있는 거군요.

사교육비 절감하겠다, 대폭 절감하겠다…… 사교육비 줄어들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사교육비도 다행히 근자에 다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 지금 그러면 통계청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2010년도 4% 증가했다, 무려 8300억 원 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총리님의 잘못입니까, 통계청 통계가 잘못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교육비는, 사교육비 지출은 약간 들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방과후학교라든지 그다음에 EBS를 통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함으로써 그야말로 사교육비가 절감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 정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여하튼 상승세는 꺾었다고 봅니다.

○**김재윤 의원** 한나라당이 선거 때 반값등록금 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마는 이제 대통령은 자기 공약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등록금…… 대학생들이 대학등록금 때문에 빚을 안고 대학문을 졸업하고 있어요. 떠나고 있어요. 이거 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대책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상당한 대책을 지금까지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 그런데 대학생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총장에게, 정부에게 항의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저희로서는 대학등록금 인상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각종 장학제도라든지 또 대학 수업을 여하튼 기부라든지 또 다른 요소로써 다변화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 반값 아파트, 정부 여당이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번에 공약 폐기한다 그러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요컨대 LH공사가 담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LH공사의 재무건전성 때문에, 여러 가지 빚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어서 민간 부문을 좀 끌어들이고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 공약 중에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소비자물가 상승률, 조사국가 21개 국가 중에서 가장 상승률 1등으로 높아…… 다른 거 1등 해야겠지요. 그리고 기름값, 통신비, 사교육비 다 올라, 대학등록금 올라, 전세가격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께서 이제 결과적으로 또는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하셔서 질책하시는 것은……

○**김재윤 의원** 이거는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한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감내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정 투입이 증가되고 또 저금리 정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 탓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정부의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하에서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애당초에 정부가 계획했던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갈 수 있고 정착을 시킬 수 있을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윤 의원** 총리님, 그렇게 답변하시듯이 하면 대통령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다른 거 몰라도 경제 하나만큼은 제대로 살릴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경제 하나만은 제대로 해야지요, 다른 건 몰라도.

○**국무총리 김황식** 외국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회복에 대해서 그야말로 리커버리(recovery)의 텍스트북(textbook)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재윤 의원** 총리님!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측면도 여하튼 감안을 좀 해 주시고, 다만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노정이 된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윤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피명 든 서민의 가슴에 또 한번 못을 박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총리님!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재윤 의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연간 60만 개씩 30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공약하셨습니다. 지켜졌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작년에 32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또 금년 들어서 한 40만 개 이상 일자리가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

물론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는 미흡합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특수한 경제위기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윤 의원** 총리님의 모든 답변에 케를 같이 하는 것은 특수한 해외 경제위기 상황……

○**국무총리 김황식** 2008년 사건이야말로, 사태야말로 우리가 20세기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최초로 광범위하고 가장 심각한 그런 사태였습니

다.

○**김재윤 의원** 거꾸로 돼야 되는데요. 실업률 증가, 고용률 하락,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해야겠지요.

그리고 특히 청년실업,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 우리 청년에게 희망이 없다면, 청년에게 일자리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실업 특단의 대책회의 한번 총리,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실업률은 3.7%, 4% 미만인데 청년실업률이 8%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장 실업 중에서도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또 연결시켜서 설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로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편으로는 구직난이고 한편에서는 구인난이고 이런 우리 경제 현실의 mismatch도 있고 또 그밖에 대학진학률이 높아져서, 또 일찍 사회에, 가령 기업이나 공장 쪽으로 가서 일하는 것을 피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마는 그래서 말하자면 마이스터고라든지 전문화 고교라든지 이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말하자면 이 정부는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 수행이 효과를 발휘를 해 가지고 여하튼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김재윤 의원** 총리, 이 자리에서 질문하니까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적어도 청와대,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회의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일자리……

○**김재윤 의원** 적어도 청년실업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한 번 없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계속해서 하고……

○**김재윤 의원** 일자리 창출 전체회의는 있지만……

○**국무총리 김황식** 그 안에……

○**김재윤 의원** 청년실업만 한 적 없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닙니다.

○**김재윤 의원** 제가 다 조사하고 나왔는데.

○**국무총리 김황식**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국가고용전략회의,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김재윤 의원** 그러니까 전체 일자리 회의, 해야지요, 당연히. 적어도 청년실업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보이는 회의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실업률 해소하고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청년실업률 해소입니다.

○**김재윤 의원** 그러면 최소한도 청년실업률 8.5%, 떨어뜨려야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 의원** 제가 청와대에다가 청년고용대책 특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의무로 하면 공기업의 경영자율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저희도 말하자면 공기업에서 가능한 한 많은 청년들을 취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취업시키느냐 이런 점도 경영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 총리님, 자체분이 비정규직이다 그러면 총리님 속상하시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겠지요.

○**김재윤 의원**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양산될수록 가정 불안하고 사회 불안하고 직장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정규직을 더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을 개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고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당연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화로 하기 위한 각종 일자리 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 총리님, 대기업은 살맛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경제력 집중 규제 최소화하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하겠다’, 이게 지켜졌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성장의 차이가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정부도 그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실효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윤 의원** 이런 공약에 맞춰서 한 결과 10대 재벌 계열사 수 237개, 62.4% 증가, 10대 재벌 사내…… 보유율 무려 429% 증가, 생산지수 7.2% 증가, 중소기업 생산지수 11.8% 하락.

안 됩니다, 이거. 이런 구조 개선해야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 그리고 세계 최강의 디지털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IT 경쟁력지수 13위 하락했습니다.

IT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일각에서 우리나라 IT의 경쟁력이 하락했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작년도에 벤처기업 수가 최초로 2만 개를 돌파했고 IT 분야 수출이나 무역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IT 강국의 위상은 기본적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이용해서 여론 조작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여론 조작이요?

○**김재윤 의원** 윤희구 의장 양심 선언한 것 보도 못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처음 들었습니다.

○**김재윤 의원** 이것 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와대 대통령실’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세종시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와주

신 덕분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글썄요.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건데 그게 어디에서 근거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윤 의원**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타당한 결정이었습니다—전국환경단체협의회 회원 일동’ 이것도 청와대 요청으로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마는…… 물론 우리나라, 다양한 의견이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뭐 각자 단체는 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의사 발표도 하고 표현도 합니다만 여론 조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윤 의원** 문제는 정부가 사단법인 등록해 주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해 주고 그리고 행사부가 예산 지원해 주고, 그래서 중학생부터, 그 어린아이 학생들부터 자원봉사자 모집해 가지고 원고료 예산 지원해 주고 자원봉사 실적 증명서 내 주고, 말이 됩니까, 이게?

○**국무총리 김황식** 여론 조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의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수단체 이용해서 맞불집회까지 만들고 있어요, 청와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이런 이야기 꺼내기 싫지만 우리 사회에 우파·좌파 다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좌파는 좌파대로……

○**김재윤 의원** 문제는 정부 예산을 지원하면서 독려하니까 문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시민단체를 지원은 하겠습니까마는 정부가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지원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윤 의원** KBS 수신료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너무 오랫동안 2500원에 동결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 환경이 변화되고 또 그쪽으로 발전을 많이 시도해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신료가 적정선에서 인상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KBS가 경영

을 보다 합리화하고 보다 공공성을 더 확보하고 또 가능하다면 2TV의 광고도 없애거나 줄이면서 이러한 양쪽의 노력이 병행이 되면서 KBS 수신료는 적정선에서 인상이 되어 가지고 합리화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재운 의원** 과학경제의 산실 카이스트, 사람 잡고 있습니다. 특감 보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교육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 이걸 관심 갖는 정도가 아니에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 카이스트 이사회를 한다고 그러합니다. 지금 카이스트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들이 지금 노출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까지 사실인지 하는 것을 정확히 가려서 그 해결책을 도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이사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남표 총장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국민들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총리님! 학생 4명, 교수 1명이 자살했어요. 이것 대비극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뭐가, 어느 대목이 어떤 정도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제 카이스트 교수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저도 놀랐고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나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교수님 경우는 무슨 연구비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듣고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가,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들은 잘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회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김재운 의원** 이명박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법안인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면서 그 법안에 원자력 진흥 조항을 한 장으로 넣으려 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대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만약 그게 넣어진 상태로 통과되었으면 국제적 망신 당했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는 원전 정책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원전이 가지고 있는 공해가 적은 산업이다, 전력 생산 방법이다 하는 취지하고 그다음에 생산 단가가 높다 하는 이와 같이 매력적인 이런 대목은 또 살려나가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안전이 우선이다, 둘째는 경제성이다,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에너지여야 된다 이런 점을 잘 조화를 시켜 가면서 정책을 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후쿠시마에 그러한 이례적인 사건이 생겼다고 해 가지고 심도 높은 검토가 없이 원전 정책을 가령 포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원전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재운 의원**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는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안전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선 저에게 주어진 제일 큰 과제다 생각을 합니다.

○**김재운 의원** 총리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시중에서 검찰이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의 자화상입니다.

검찰 개혁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으로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든다거나 또는 있는 기능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현행법하에서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윤 의원**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공개석상에서 돈 봉투 돌린 다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4월 1일로 생각을…… 4월 2일 토요일로 생각을 합시다마는 그날 전국 검사장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직한 검찰의 미래발전 전략하고 일선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에 대해서 주되게 토론을 했는데요. 그것 하면서 일선 검찰의 특별수사역량을 강화하되, 특별수사 활동을 활발히 하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활동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급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김재윤 의원** 오히려 발설자 색출하자, 책임 묻자, 어떤 사람은 이것 왜 안 하느냐,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발설자 색출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시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으니까 특활비가 예산편성 목적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김재윤 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의 사위 전종화 씨가 연루된 씨모텍 사건 조사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최근에 고소 진정이 들어와서 한 10여 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 철저히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아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재윤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과 삼척 MBC의 통폐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저희 위원회로서는 아직 MBC 측으로부터 아무런 요청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윤 의원**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MBC 측에서 요청을 해온다면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MBC 측

에서 그 문제에 대해 전혀 아무런 제안이 없습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제안해 온다면 현지 주민들의 의견, 관계자들의 의견, 그리고 MBC 수뇌부의 의견을 모두 모아서 합리적인 답을 도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윤 의원** 방송은 다양성이 인정돼야 하겠지요? 그리고 지역문화를 보듬는 것도 방송의 역할이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것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김재윤 의원**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이 4개 낙후지역의 유일한 언론, 문화창달의 터전입니다. 삼척 MBC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삼척MBC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민들의 이익을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삼척MBC 문제도 공식적으로 제안해 온다면 그러한 시각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의원** 최시중 위원장께서 종편 특혜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시중의 여론이 많은데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시중의 여론이라기보다는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는 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새로 출범하는 미디어기 때문에 순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이지 우리의 힘을 넘는, 우리의 궤를 넘는 그러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김재윤 의원** 치우치지 않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단코 미디어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발전시키는 선에서 적절한 선을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김재윤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국무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제주4·3은 제주도민에게는 4·3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하고 제주를 평화의 섬, 번영의 섬으로 만들어 가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의 희생을 기리고, 그리고 또 4·3의 가치를 승화하기 위해서 제주4·3을 국가추념일

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제주4·3 행사에 다녀와서 느낀 겁니다마는 제주도민의 염원도 있고, 또 다른 기념일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서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윤 의원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를 비교한 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여정부 때는 추도사를 대통령이 다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전부 국무총리, 장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일정도 없는데 4·3에 참석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4·3에 대해서 무슨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윤 의원 4·3 유족들 유해 발굴 사업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유해 발굴 사업이라든지 그 밖의 한정된 범위라 할지라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광객 부가세 환급, 국유재산 양여, 국제학교 입학자격 완화,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 등 핵심이 들어 있는 제주특별법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제주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의원 영리병원, 여야에도 논란이 많고, 그리고 여여 간에도 논란이 많고 이런 논란이 많은 영리병원 조항 넣고 통과시키려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지역주민들의 상당수, 오히려 다수가 원하고 있고, 저희 중앙정부가 판단하기에도 그것은 제주 발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른 논란은 뒤로 하더라도 제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 만큼 함께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의원 그 영리병원 때문에 제주도를 불모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리병원은 제주도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이 제주특별법에서는……

○김재윤 의원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하면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다른 법률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거지……

○김재윤 의원 만약 다른 법률은 반대하실 겁니까, 제주도에서는 허용하고? 제주도에 한해서 허용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정부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기왕에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외국 법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제주특별법하고는 관계없이 그것은 다른 법에서 다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을 다룸에 있어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의원 앞으로도 제주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렵다 이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또 다른 모든 사항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정부가 우선 제주특별법 통과시키기에 급급해 가지고 함부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제 입장입니다.

○김재윤 의원 갈등을 풀어야 될 총리실과 청와대가 갈등을 더 조장하고 있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닙니다.

○김재윤 의원 해군기지 문제 풀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갈등도 지금 제주도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원 사업을 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이 원활하게 처리가 되면 그런 문제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에 내려가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는 강 모 씨하고도 대화를 했고, 정말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건설적인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김재윤 의원 총리께서 제주가 아프면 반도도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윤 의원 제주도는 이명박 정부 때문에 아픕니다.

총리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적어도 어르신들의 틀니, 돋보기안경, 보청기를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는 합시다마는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윤 의원**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 지원할 의사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재윤 의원** 대통령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희망을 주는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김재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 출신의 한나라당 존경하는 유재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수영구 출신 유재중 의원입니다.

모든 사회는 사회구성원 간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법과 제도라는 약속을 만들어서 그것이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국민에게 약속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때 신뢰와 화합이 쌓여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해 가지만 약속이 깨질 때 원칙이 무너지고 불신이 쌓여 갈등이 형성됩니다.

지난 수년간 국민에게 약속했던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됐습니다. 쇠퇴해 가는 지방경제의 한 가닥 희망이었던 신공항이 폐지되면서 지역민은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약자에게 배려가 없는 정부를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약속과 배려야말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국가 운영의 기

본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혼선으로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말미암아 사회 갈등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구체적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유재중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 경제연구소가 추산한 우리나라 사회 갈등 비용이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 비용이 연간 3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갈등 비용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 결정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체되면서 그 갈등이 증폭된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형 국책사업을 공약하고 입안하는 단계에 있어서 타당성을 철저히, 신중히 검토하고 하는 그런 사전 준비적인 노력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중 의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정책 일관성의 결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정책 일관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한 연구소는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41점밖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최하위지요. 정부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전에 대통령께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혹시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론보다도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평가위원회의 보고를 평가위원회 위원장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받고 또 그 결과를 놓고 관계 장관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어쨌든 이 백지화 발표는 정말 영남권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다 하는 큰 부담을 안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하는 것이 더 큰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유재중 의원** 그렇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입지평가위원회 발표 어디에도 지역 발전이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께서서는 앞서 여러 의원들 질문에 AHP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0.5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AHP 기법, 분석은 경제 자체하고…… 그냥 국토해양부에서 기술적 측면만 강조해서 분석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만 총리님, 입지평가위원회 발표문 보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당일 발표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유재중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하는 AHP 기법은 정책적 분석과 지역 균형 발전, 경제성 분석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는 공항 입지평가 성격에 맞추어서 축소 평가했다는 결론입니다.

입지평가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항목인 정책적 평가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입지평가위원회의 유일한 평가 자료인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및 입지평가 보고서를 한번 보시지요.

‘본 연구의 목적과 수준은 세부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파급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토 균형 개발, 교통, 물류, 문화관광, 공항 이용 부문의 5개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이런 용역만으로 신공항 결론을 짓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비타당성조사와 신공항 입

지평가는 그 취지와 평가 내용이 조금 다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 계획에 대한 경제성·정책적 분석 등이 실시되어야 당연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도, 필요성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함께 반영이 되는데 이번 신공항 입지평가는 적합한 공항 입지가 어디냐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제적·기술적인 관점 외에 공항 운영의 사항이라든지 항공 회선이라든지, 보다 더 큰 이러한 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 적어도 이 시점에서 가덕도와 밀양이 공항 적지가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중 의원** 그러면 총리님께서서는 향후 신공항이 필요한데 입지 선정으로서 가덕도나 밀양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국무총리 김황식**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영남권 신공항이 필요성은 있다 하는 것이 참여정부 때나 그 뒤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공항을 어디에다 할 것이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35개 후보지 그리고 5개 후보지 그리고 마지막 2개 후보지를 전부 조사했지만 적지가 아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항공 운영상으로는 또 환경 훼손 문제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적지가 존재하고 그런 적지를 상대로 해서 모든 조사를 해서 경제성이나 그런 문제들이 다 충족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공항 적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재중 의원**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남권 신공항 필요한데 어느 입지, 신공항 부지를 찾아도 없다, 그런 부지가 없다, 참 이런……

○**국무총리 김황식** 필요성과…… 필요는 한데 그 적지를 찾을 수가 없으면 그것은 필요하지만 못 하는 것이지요.

○**유재중 의원** 그런데요, 여기 AHP 분석에서도 인천공항과 대비되는데요, 여러 가지……

인천공항 같은 데는 국가 균형 발전, 전체의 50%에 달하는데 신공항은 1.8점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부와 청와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라면 백지화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솔직하게 가덕도도 아니고 밀양도 아니고,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이것을 국익을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서지 않는 것이지요.

총리님, 또 하나 중대한 문제점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항의 경우에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다가 신공항 사업 건설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유재중 의원 그런데 앞서 5개년 계획에서 동북아 허브공항 추진이라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신 검토 중이라는 뜻은 하위, 밑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한 건데, 실제로 대법관까지 지내셨으니까 행정절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서 명백히 이 사업은 추진한다 이렇게 확정적인 계획이 세워졌으면 의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 경우는 계획을 확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건설을 검토하고 검토를 위해서 관련된, 전제되는 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유재중 의원 아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계획의 변경 자체는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재중 의원 동남권 신공항 건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1차 지역개발 5개년 계획에……

○국무총리 김황식 검토하는 것으로……

○유재중 의원 검토하는 것은 나중에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하위 개념에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앞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TF팀을 구성해서 신공항의 필요성, 적지라든지 다시 한번, 장래에 세워질 신공항입니다만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가덕도와 밀양은 적지가 아니다, 따라서 그곳에 신공항 추진은 하지 않기로 한다 하는 것이 이번에 정부의 결정이고 그동안의 경과로 보면 영남지역에 35개 대상지가 있었지만 그 어느 곳도 필요한 공항의 적지라고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검토, 연구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경제성과 공항 운영 그리고 환경훼손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지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중 의원 신공항이 필요하다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찾아야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유재중 의원 최적지 아니면 차선의 적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차선책을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차선책을, 보완책을 검토한다 하는 것도 저희 발표에 들어 있습니다.

○유재중 의원 알겠습니다.

미래 언젠가는 동남권 신공항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총리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유재중 의원 앞으로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닥쳐오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머지않아 큰 재난이 닥치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어떻습니까, 고령화 대책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대책

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또 보육·교육비의 전액 지원 대상 확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경감 등 여하튼 94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전 부처가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고령화 대책도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산 대책 관련해 가지고는 향후 5년간 2011년부터 15년까지 총투자 규모를, 저출산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여하튼 약 40조 원을 우리가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중 의원 지역에 다녀보면 젊은 어머니들, 세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정부 말을 믿고,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를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저는 저출산의 근본원인으로 전통적 가치관 붕괴를 지적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후 세대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해서 자녀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은 16.7%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정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양 문화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우대나 공동체 문화가 강화되어야만 출산율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가치관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과거에는 전통적인 효 정신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데 아마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서 시대 상황이 바뀌면서 점차 자녀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정신이 좀 희석되어 가지고, 또 새로운 복지이론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은 역시 사회나 국가가 부양 책임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가정공동체가 화목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부

수적인 효과로서 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정부의 재정도 조금은 아낄 수 있어서 그 아낀 부분을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풍으로 내려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풍토를 만들면 이게 여러 방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복지에 관한 정책 그리고 사고가 우리 사회를 이미 잠식하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와 사회는 그러한 현실을 인정을 하면서 정책을 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것을 사회적인 인식의 공감대 확대를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정말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서 전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유재중 의원 정부가 몇 가지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이 있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육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아직 보육 여건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맞벌이 부부들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보육에 대해서……

또 24시간 보육시설이라든지 휴일 보육시설 이런 아주 전부 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보육시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보육시설평가인증에 반영하는 등의 어떤 유인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최고 소득계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이 지금 위기이지 않습니까? 건보 재정이 6조 3000억이라는 적자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과감히……

최고소득구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제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중 의원 그리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조사에 보면 미국은 순이민율이 1%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이 0.1% 증가하고 있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도입해서 경제성장에도 기여하고 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소위 다문화사회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현실로 닥쳐 와 있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이런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민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국민으로 통합시켜서 국가발전에 활용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방면에서 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중 의원**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인데 국가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지역에서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국가에서 이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유재중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장관님, 제가 오늘 약속과 배려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배려의 정신이 필요한 곳이 바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인데요. 이런 소득 격차가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과부는 교육 격차를 특히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중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을 비교해 보니 소득상위 10%에 해당하는 계층은 교육비 지출액이 52만 원인 데 비해 소득하위 10%에 해당하는 계층은 6만 원 정도도 안 됩니다. 무려 9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 투자에 대한 격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5년간 소득하위 10%의 교육비 지출액은 7000원 증가한 반면에 소득상위 10%의 지출액은 14만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학생일수록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쉽게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인데 심화되는 교육 불균형 현상은 고소득층 자녀들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의 세습과 빈곤의 대물림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사회의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육 격차 해소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중 의원** 학생 시절부터 이 공정한 경쟁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희망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경쟁의 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기회균형선발제 등 다양한 대안을 추진하고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대입에서 기회균형선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재중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농어촌학생 또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특성화고교 졸업생 등에 대해서 입학 정원의 11%까지 선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유재중 의원** 부와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공평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도 옛날과 같이 개천에서 용이 나듯이 그런 제도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공정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야말로 공정한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그런 취지에 동감합니다.

○**유재중 의원** 들어가십시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지난 4월 5일 민주당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역아동센터 예산 등이 작년 예산의 날치기 처리로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 주장은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유재중 의원**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된 일부 사업들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결식아동을 위

한 급식지원 예산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가 있는 지난해 연말쯤에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의 이 방학 중 급식예산이 확보된 상황을 파악을 했고요. 한 2~3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조금 미흡한 지자체의 경우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재중 의원** 그렇습니다. 이 정부에 오해가 없도록 좀 바로잡아 주시고요, 우리 보건복지부장관님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지난 연말에도 같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몇몇 일간지에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확보된 예산 내역에 관해서도 충분히 홍보를 한 바도 이미 있습니다.

○**유재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는 열 자식을 품에 안은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잘난 자식보다도 조금 부족하고 못 살아가는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일 겁니다.

지방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방의 낙후된 지역과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을 우선 배려하는 따뜻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곳을 먼저 배려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지켜질 때 이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유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 출신의 존경하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향 충남 아산 출신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입니다.

우리는 늘 이 본회의장에 들어설 때마다 입구에서 이 충무공 동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14년 전인 1597년 4월 11일 바로 오늘자 난중일기를 다시 보았습니다. ‘새벽꿈이 심히 번거로워 마음을 견잡을 수가 없으니 이 무슨 징조이냐’ 하고 변함없는 우국충정을 적고 계셨습니다. 우심전전야(憂心轉轉夜), 잠 못 이루

며 오직 나라 걱정만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국정은 표류하고 있고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 정부에 진정으로 몸을 던져서 국정을 챙기는 몇 분이라도 있다면 우리 국정이 이처럼 혼란스럽고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21세기 세계 경쟁의 시대에 제대로 된 미래 국가 비전과 전략에 대한 고민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구제역, 일본 원전 문제, 신공항 건설, 국제과 학비즈니스벨트, 전세·물가 대란, 자살 증가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지역·계층 간 갈등과 분열의 골은 깊어지고 있으며 무너지는 중산층과 서민들, 농어민들의 한숨 소리만 커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정 전반적으로 이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미약하다, 아마추어 정부냐 하는 비판과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개선·보완해야 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우선 총리인 저와 내각은 나름대로 맡은 분야에 대해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갈등·대립이 증폭되어 있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의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정말 멸사봉공의 자세로 원활히 국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조율을 더욱 강화하고 현황 문제 해결에도 신속히, 적절히 대응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총리, 이렇게 총론적인 답변, 전에 하시던 답변을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높여 갈 거냐 그 개선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내각이 있고, 총리가 있고, 또 대통령이 계십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밖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워낙 우리 사회에 갈등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고 또 의원님

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처 능력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수 의원 총리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회의 갈등 여러 가지 높은 것하고 우리 국정과 내각에서 그걸 제대로 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제역이나 원전 문제 굳이 예를 안 들더라도 부처가 손발이 안 맞고,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인지 그것조차 불분명하게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대응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총리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총리실의 기능이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이 어려운 국정을 타개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잘 알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블랙 스완’이라는 영화처럼 잘못된 일이 또 잘못된 일을 덮어 가는 이런 국정 상황이 반복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불란서 등은 이미 과학벨트를 정해서 저만치 앞서 가고 있습니다.

총리님,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과학벨트를 공약한 대로 조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후보께서 ‘과학벨트는 행정도시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입지를 어느 곳에 정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특별법이 4월 5일 발효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루빨리 입지를 선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쯤 가시화되고 뭘가 건설이 되고 추진이 돼야 됩니다.

지금에 와서 ‘부지를 어디로 정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술한 갈등과 혼란을 겪는 것이 안 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이명수 의원 총리님, 대덕연구단지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명수 의원 지난 40년 동안 역대 정권에서 약 40조를 투자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연구기반을 구축했다고 보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명수 의원 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입지 선정의 첫 번째 기준이 연구 기반, 산업 기반을 얼마나 구축 했냐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덕특구와 과학벨트가 직접 연계 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가장 높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이미 과학계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입지가 선정이 될 겁니다.

○이명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이명수 의원님의 지적도 많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고,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 위원회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명수 의원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하고 이 과학벨트와 대덕특구가 연계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높으나 안 높으나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구도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명수 의원 그렇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했고, 교과부가 지난 4월 6일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도 ‘세종시 지역이 기존에 과학연구 개발특구가 있어서 최적합한 지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혹시 말씀 들어 보셨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까 교과부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세종시가 적합지의 한 곳이다’ ‘후보지다’ 하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 이곳이 ‘최적지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명수 의원 저희한테, 문서에는 분명히 최적지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반드시 꼭 이러한 흐름이, 기조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과학벨트냐, 과학도시냐’ 이것에 따라 분산 배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궁핍한 의견이 갑자기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는 과학벨트하고 과학도시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충청권이 아닌 다른 지방에 가서 대통령께서 과학벨트 공약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잘 아시는 RTP나 실리콘벨리, 세계적인 이런 과학파크나 단지가 분산 배치된 사례를 말씀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또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도, 또 그런 예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문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명수 의원** 위원회가 하기는 하는데요, 이권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혹여 정치 논리나 민심 수습용 쪼개기로 나눠진다면 정말 나라를 망칠 수도 있다는 과학계 인사들의 심각한 우려를 귀담아들으셔야 합니다.

과학벨트조성 특별법상 입지 선정의 기준은 다섯 가지입니다.

‘연구·산업기반의 구축과 집적성, 우수한 정주환경,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 확보 용이성, 지방의 안정성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국내 다른 후보지에 비해서 이쪽 세종 지역이 객관적으로 월등히 유리한 곳이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조성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단지 대통령 공약 때문 만에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 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과학벨트는 정말 세계적인 성장 네트워크로서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과학논리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도시 지정 해제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남권의 신공항 백지화에 이어서 LH가 시행하던 사업들을 줄줄이 백지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38개 신규 사업 중 3분의 1을 해제하는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만 평, 수십만 명의 주민 재산권이 여기에 관련돼 있습니다.

이 정부가 만약에 이렇게 ‘해제 정부’가 된다면

저는 곧 ‘낙제 정부’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해제의 기준이 되는 경제적 타당성의 검토 결과를, 누가, 어떻게 검토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전적 설명이나 대화나 논의의 자체가 생략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논의나 절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해제한다고 발표하는 이 일하는 방식 이 자체도 문제입니다.

실사 만성적인 부채 때문에 해제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해제가 되면 관련된 이 주민들한테, 이 지역한테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LH공사의 부채 등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예정됐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해제를 당하는 지역주민들의 경우에는 상실감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LH공사가 건전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관련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원칙적으로 잘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점이 미흡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만한 사정도 또 있겠지만 그것은 바른 절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수 의원** 잘못된 것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지시해 주고 확인해 주십시오.

총리님, 이 아산 신도시는 다른 곳보다 길어서 20년 전부터 추진돼 온 곳입니다. 20년간 오매불망 기다려온 지역주민들은 ‘설마 이번에 여기를 해제하겠나?’라고 하다가 큰 충격을 받아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제약돼 온 이 재산권 보상의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 절차 이것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을 인정하시는지요?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은 지역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이 접근·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기준으로 그 문제를 풀어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수 의원** 기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전국의 수천만 평의 땅을 정부에서 고시했다가 해제하는데 앞으로 보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좀 챙겨 보시고요.

또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정부만을 철석같이 믿고 빚을 내서 이곳으로 이주해 온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기로 했던 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망연자실합니다.

제1금융권만 해도 약 1200억으로 추정되는 금융권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 채무상환 기간을 유예한다든가 저리자금으로 용도 전환을 해서 이자 부담을 줄여 준다든가, 필요한 경우에 장기저리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때 특별재난지역 피해 수준의, 그런 이상의 구체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총리님, 검토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국토해양부와 LH공사로 하여금……

○**이명수 의원** 총리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토해양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재부나 관련 부처가 많습니다. 종합적인 점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우선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토대 위에서 다른 문제들도 같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수 의원** 다음으로 이제 해제가 되면 현재 도시계획지역을 농림지역이나 비도시계획지역으로 용도 전환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2, 3년 걸립니다. 해제가 된 뒤에 이주민들이 또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 비용과 기간을 줄이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서 그런 문제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들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수 의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도로, 용수 이런 기반시설공사 중단해서는 안 되겠죠? 계속해야 되겠죠?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 실정에 따라서 개별

적으로 정해져야 되는 문제지만 심도 있게 검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

○**이명수 의원** 저는 개별적인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까지 해 온 여러 가지 도로나 용수 기반공사 이걸 어느 정도 시키는 조절할지 모르지만 계속 돼야 되고 정부의 투자가 이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공감하시죠?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명수 의원** 또 무엇보다 신도시 추진을 전제로 해서 이곳에 새롭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직장마저 옮겨야 했던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와 생활안전대책 이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조기에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까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국토부나 LH공사 차원에서……

○**이명수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를 검토한 뒤에 해제가 돼야지 이제 해제해 놓고 검토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이 관련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독려하고 실천력을 담보한다면 이거에 관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반드시 특별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명수 의원** 이 다섯 가지 문제를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 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탕정신도시 370만 평 중에 매곡 지역이라는 곳 23만 평이 이번에 다시 포함됐는데, 이거는 다시 재지정돼야 됩니다. 정부가 보상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내놓고 또 생활근거지는 빠져 있고 주택은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서로 엉키는 이런 이번 지정 해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해서 다시 이 문제를 재검토·재지정하도록 총리께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헌정사상, 개발행정상 이렇게 대단위로 정부가 지정한 걸 스스로 해제하는 이런 일은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농민과 서민·취약 계층 문제입니다.

우리 농촌, 지금 정말 '춘래불사춘'입니다. 봄이 왔지만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지금 농자재·농약 값이 15~20%가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금년 농사지을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농사를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한미, 한·EU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에 만든 FTA 대책을 지금도 그대로 재탕 삼탕 반복해서 내놓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한미, 한·EU FTA 농어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도 총리께서 직접 팔을 걷고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또 기름값 문제 여러 번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검토를 생각 중이다……'

검토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저희로서도 고려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돼야 될 텐데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마는, 또 SK오일 등에서 3개월 동안 100원을 리터당 내렸는데 그러면 3개월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이명수 의원 정부의 고충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수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정책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정부가 인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정말 택시나 버스·화물 운전기사 또 기름을 때야 가동되는

비닐하우스 운영자, 농민, 어민…… 서민·취약 계층 이 사람들에 대한 서민 감세 조치를 서둘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부자 감세는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하면서 이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자는 감세, 왜 이렇게 꾸물거리고 왜 이렇게 늦냐 그걸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확실하게 보여 달라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요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또?

○국무총리 김황식 생계형 자영업자, 농어민,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선별적인,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7개월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는 결론을 내리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단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 연료지원 등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확히 또 되도록 하는 것을 관리하고 챙기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명수 의원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은 그래도 감세를 직접 하는 게 필요하겠단, 그런 요구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좀 검토를 이제 끝내시고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그늘지고 소외되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밋빛 경제지표의 뒤편에서 어렵고 힘들게 자신의 직업을 이어가고 있는 계층 중의 일부가 택시운전기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전국에 수십만 명입니다, 택시운전기사들이.

근로의 정도와 여건에 비해서 보수 수준이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물론 택시운전기사 그 자체보다 택시제도의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택시승객과 택시업주, 운전자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 속에서 이 택시운전기사의 문제가 검토되고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온 택시 문제,

이것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총리!

그 대안 중의 하나는 택시를 선진 외국과 달리 대중교통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방안,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택시제도의 도입 방안, 개인택시 운영의 보다 효율적인 지원 문제, 이런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꼭 개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시는 공영택시 도입 등에 관해서는 관계 부처로 하여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택시를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시켜서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운행하는 개별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대중교통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라는 이런 문제들을 관계 부처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과거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보다 좀 쇄신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이런 정부 차원의 택시제도 개선안, 꼭 마련해 주시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명수 의원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 민의의 전당에 있는 분들에게는 서로 존경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국회의장을 벗어나는 순간 과연 국민으로부터 우리가 존경을 받고 있는지 겸허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고 미래의 비전이 창출된다면 국정은 제대로 움직일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국정이 국민의 지탄과 비난, 퇴보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과거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면적인 불신에 빠진 국정운영 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재정립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시다. 4대강 사업에 진력해 온 이 정부가 물에 관한 가장 평범한 진리인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

다’는 이 말을 제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면 돌아오게 될 4·28 이 충무공 탄신을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고 나라를 걱정하는 인사들이 늘어나 정말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면서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이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존경하는 강성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6.2%의 높은 경제성장과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세계 경제의 풍향계를 움직이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놀라운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계가 솔선하여 임금동결 등 고통을 분담했고 노사관계 안정에 적극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민소득 2만 불을 회복하고 기업이익이 늘어난 만큼 노동자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노동과 자본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가족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전세 대란 속에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의 급등으로 가게 살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현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난 13년간 유예되었던 노동법 개정으로 도입된 타임오프는 86%의 도입률로 연착륙하고 있지만 장기 분규와 정리해고 등 갈등이 이어져 노사관계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금년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노 간, 노사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자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정부는 노동가족들의 어려운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주택, 물가, 실질소득, 일자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주체들에게 더 이상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질 청년세대, 산업의 당당한 주역이지만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과거 산업발전의 역군이었지만 노동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베이비붐 세대, 이 순간에도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일자리와 생계를 걱정하는 근로 빈곤층,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주인으로 일과 보람을 가지는 날이 선진 대한민국이 자리매김하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과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고용과 양극화 문제 해소와 노사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선결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황식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최근 지구환경 변화와 국제정세 불안,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월세 대란 등 국내외적 악재들로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서민생활은 물론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우리 서민들이 물가상등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농산물 수급안정, 할당관세 등을 통한 원가부담 완화, 그리고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확대, 담합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그러한 단기적인과 대책과 함께 또 다양한 장기적인 대책,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독과점 시정 등 구조적인 대책과 아울러서 각종의 원가절감 노력이라든지 또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천 의원** 2010년 3월 전경련은 30대 기업이 신규채용을 31.2%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취업자 수가 오히려 3만 1000명이 줄었거든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게 압니다마는 2011년에 들어서 2월까지 보면 한 3만 명 늘었습니다.

○**강성천 의원** 그게 늘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늘었는데 그건 좀 다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기업에서도 주로, 특히 대기업에서도 민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고 또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정부의 조치가 뒷받침이 된다면 기업도 고용을 늘려갈 것이고 또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강성천 의원** 총리님 생각은 대기업은 줄었고 그리고 중소기업은 늘었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300명 이상 사업장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통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통계에 관해서 금년 들어와서는……

○**강성천 의원** 아, 금년에?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의원** 이처럼 대기업들은 고용 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지금 도외시키고요, 사내 하도급과 외주 하청을 쥐 노동 비용 아끼기, 기업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지금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같이 상생하고자 하는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고 그것이 실제로 적용,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또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강성천 의원** 총리님,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빠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의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고용 문제도 심각한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소위 말하는 초고령사회,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면서 전문적인 연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29일 국무위원 토론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서 논의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세워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 유지를 어떻게 늘려갈 것이냐, 고용 유지 기반을 마련하고 또 은퇴 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여건 조성,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유지를 위해서 문화활동 자원봉사 등 이런 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새로운 유망 산업을 발굴 육성을 해서 이분들이 그런 데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다양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이걸 차근차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나갈 방침입니다.

○강성천 의원 총리님, 이 베이비붐 세대가 한 때는 우리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됐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셨습니다.

○강성천 의원 이 친구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경험이 있고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의원 그리고 이들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해서 빈곤계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방금 말씀했다시피 그분들이 좋은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일반 취업전선에서 불가피하게 물러나게 되는 이런 것은 국가를 위해서나 본인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가 않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발전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러한 길을 좀 마련을 해 드리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말하자면 부모는 봉양했고 또 자식들한테는 부양을 못 받는, 말하자면 낡은 세대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좀, 어떤 의미로는 불행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회안전망 견지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성천 의원 그것 대책을 좀 세우고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대책을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강성천 의원 총리님, 지금 우리 퇴직 평균연령이 몇 살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알기로는 한 57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예, 57세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강성천 의원 그렇다면 우리 고령화시대에 걸맞게 60세 정년 의무화뿐 아니라, 대만이나 일본은 벌써 65세 정년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고령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대해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뭐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능력이나 또 건강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하는데, 다만 우리의 일자리가 다소 부족한 입장에서 그분들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산업 현장에 미치는 파급적인 효과 그리고 젊은 세대의 일자리하고의 충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분들이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이상 이분들의 정년이 연장이 돼 가지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진국에서도 정년을 이렇게 늘려가는 것에 따라서 오히려 말하자면 데모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의원 총리님, 이제 최근에 경기 회복 됐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강성천 의원 기업이 이제 경기 회복이 됐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난 만큼 노동자 임금이 거기에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강성천 의원 더군다나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저하돼서 가게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노동 가족들의 실질소득을 올려 주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시다시피 물가 양등 등으로 인해서 실질임금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마는 또 이것도 다행히 최근에 들어서 실질임금이 다소 증가하는 현상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인위적으로 실질임금을 인상시키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간접적으로나마 물가 문제 그리고 보육, 교육, 주거안정 등 이렇게 다양한 방향에서 실질 임금이 인상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강성천 의원 총리님, 현재 퇴직연금 적립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강성천 의원 그리고 연금시장, 향후 연금시장의 전망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올해 1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이 약 30조 정도가 되고 또 이게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급속히 증가를 해서 2015년에는 78조에서 106조, 그리고 2020년에는 149조에서 187조로 이렇게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그렇지요?

지난 1일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이 6.7%인 데 비해서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2.8%에 불과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의원 이런 추세라면 퇴직연금 가입자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영세사업장의 경우에 기업의 여러 가지 채무 형편,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서 연금 가입률, 도입률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비해서는 근로생활·노후생활,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 미흡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가 있고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을 하고 해서 도입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시다시피 이 제도가 도입된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널리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해서 많은 사업장에서 여기에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강성천 의원 영세사업장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강성천 의원 총리님,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금 몇 개나 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한 57개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58개입니다.

최근 연금사업자들의 과당 경쟁으로 불공정 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퇴직연금사업이 잘못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강성천 의원 연금시장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정부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과도한 고금리를 제시를 해서 현혹을 한다든지 또 대출할 때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다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행위가 있고, 이것이 장차 연금 관련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계기관 합동으로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천 의원 총리님, 연금제도가 잘못되면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게 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의원 그리고 사회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기금의 안전 관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강성천 의원 그리고 총리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5대 노동현안을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이들 노동현안들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큼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강성천 의원 분규가 장기화되면 노사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되므로 빠른 사태 해결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쌍용차·한진중공업 정리하고 등 여러 가지 노동현안을 가지고 분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 처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잘못 정부가 개입하면 그러한 것들이 나쁜 선례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노동관서나 또 수사기관에서도 노사간에 탈법적인 그런 행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확히 조사를 해서 처벌할 이유가 있으면 또 처벌할 사유가 있으면 엄정하게 처벌하는 노력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을 위한 노력들, 어느 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정한 해결책을 도모하는 그런 사회적인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의원** 총리님,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아주 이슈화되고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강성천 의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7월 현대차 하도급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한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이 판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하도급 형태로 파견되어 있는 근로자가 역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한다면 파견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또 파견법에 의해서 2년이 경과되면 사업주의 정식 직원으로 봐야 된다 하는 취지의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지금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사내 하도급 관련 노사 분규가 증가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강성천 의원**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그와 관련된 케이스들이 여러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개별적인 사안별로 그렇게 사건의 성격, 말하자면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가 됐든 자기 근로자가 됐든 어떤 지휘·감독을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는

있습시다라는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노사관계가 정해지도록 이렇게 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그러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방면으로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천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일본의 도요타자동차의 경우가 비정규직을 정기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참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노력은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사업주·기업주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노동의 유연성이 미흡한 우리 현실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와 같은 근로형태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용자 또 전체적인 근로자가 정말 합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 내지는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노동계나 또 경영계에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천 의원** 총리님, 옛날에 IMF 이후에…… 노동과 자본이 그때, 고통을 극복하자고 이 노동쪽에서 많은 희생과 봉사로 그때 IMF를 이겼는데 그 이후에 자본이 그것을 따르지 못했다고 하는 그 부분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래서 우리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내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사항 등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가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이것과 관련된 갈등·대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정부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천 의원** 본 의원은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노동을 했음에도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유로 차

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총리님, 이것을 참고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와 근로자 근로손실일수를 15% 감소하겠다고 발표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인식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고, 실제 한 지난 12년 동안 산업재해가 크게 줄지 않고 있고 정체상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고 2012년까지 15% 정도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강성천 의원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11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산재 사망자가 20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했고 하루 평균 7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이번 1월에는 특히 혹한 등으로 인해서 소규모 건설업 등에서 다소 무리한 공기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좀 줄었습니다마는 2월까지로 보면 비슷한 정도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재해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마는 사망자 수, 중대재해자 숫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중대재해의 81% 정도를, 중소건설업이라든지 또는 영세 음식점과 같은 이런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투자나 예방을 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공기에 쫓긴다든지 도급금액이 아주 적어서 현실적으로 예방이나 산재사고를 줄이는 데 신경을 덜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의 홍보와 교육, 점검 등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그렇지요? 산재를 굉장히 감소시키겠다고 매년 그러지만 산재가 줄지 않는 이유

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현행법상 산재 예방교육과 산재 예방시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좀 기준을 바꿔 가지고 종전에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요소를 지적을 하고 1차 시정조치를 지시한 뒤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던 것을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적발과 동시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건설 공사현장에서 시정지시를 하기 전에 바로 공사를, 시공을 중단시키는 그런 관행으로 좀 감독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각에서는 너무 엄하게 하는 것 아니냐, 장관이 바뀐 뒤에 이게 너무 지나치다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다소의 그런 비판을 감내하고라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고 소신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의원 예, 그래 주시기 바라구요.

장관님, 우리 산재 실태가 OECD 국가 중에 몇 번째쯤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중대사고 기준으로 보면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아니, 죄송합니다. 사고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사고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이제 통계기준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요양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작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의 진단서상 요양 필요일수가 일주일 나왔으면 일주일일을 근로손실일수로 보는데 선진국에서는 이게 실제 출근을 하지 않고 일을 못 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평면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제일 객관적이라고 생각되는 건 사망사고·중대사고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서 보면 우리가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지금보다 약 절반 가까이 사고성 사망자 수를 줄여야만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게 되겠습니다.

○강성천 의원 지금 이게 통계 나온 것 보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맨 끝에서 1등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사망사고는 그렇습니다.

○강성천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산재사망자 수가 2089명이나 되고 경제적 손실이 17조 6200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질병사고를 포함하면……

○강성천 의원 200억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2200명 정도 되고요. 질병을 제외하면, 사고성으로 치면 한 1300명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여야 됩니다.

○강성천 의원 예, 정부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천 의원 끝으로 장관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가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한 사람 특정인을 놓고 보면 무한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 지금 인질로 있는 경우에는 그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자원을 투입하거나 또 다른 생명이 희생되더라도 그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을 구출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적진에 뛰어들어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특정인이 아니고 확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서 불확정한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다시 말하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써 몇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그 가치를 불가피하게 형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가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법원 판결에도 나오는 호프만 보상 방식이라든지 등등 잔여 생애의 생산 가능량을 감안한 그런 수입, 예상 수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 등이, 경제학이나 법학이나 사회학이나 등등 해서 갑 설, 을 설 등으로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고귀한 생명을 위해서 산재 예방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감사합니다.

○강성천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폐자동차는 훌륭한 금속자원이자 심각한 환경오염이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습니다.

○강성천 의원 매년 100만 대 이상 생산되고 6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폐기되고 있는데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금속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여러 차종이 있지만 평균을 내 보면 80만 원 정도되고 2010년의 경우에 69만 대를 폐차했으니까 이것을 합산해 보면 약 5500억 원 정도 이릅니다.

○강성천 의원 폐자동차를 재활용하면 금속자원의 무역수지 적자와 환경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직 법제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 도입을 위한 방안을 지금 검토 연구 중입니다.

○강성천 의원 연구 중이지요. 하루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윤활유와 프레온가스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 부실로 토양오염과 대기오염 및 지구온난화 문제를 발생시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도 역행하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자동차를 처리하게 되면 반드시 프레온가스라는 성분에 대한 처리 대책이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유해물질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유해한 가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기술 또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완전히 지구에 또는 우리 생활환경에 해롭지 않도록 최종 처리하든가 아니면 재활용해서 자원화하든가 하는 기술인데 이와 같은 것들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가능하면 저희들이 금년 중에라도 법 개정안을 낼 생각입니다.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매년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은 얼마나 되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이미 국민 여러분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만 5100t, 1만 5000t 내외가 되겠습니다.

○**강성천 의원**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가치하고 온실가스 발생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희들도 국민 여러분께 꾸준히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연간 18조 원을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연간 약 7000억 원 정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손실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장관님,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식량자원의 낭비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소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10%만 줄여도 연간 2조 원씩 이득을 보는 셈이고 또 온실가스 차원에서 90만t을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그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7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 줄이기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10% 줄이는 방법에 관해서도 다양한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작년에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추진했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 감량화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역별로 또는 학교와 같은 집단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또 군부대와 같이 젊은층들이 모여서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곳 등 10개 영역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원별로 이른바 맞춤형 감량 대책을 추진해 보자 이렇게 했고,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등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추진책을 써 왔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최고로 근 60%, 저희들이 통계적으로는

59%로 나오는데 이만큼 감량 효과를 낸 곳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들, 총체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나쁘지만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앞으로 음식쓰레기도 종량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시행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라북도의 전주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RFID 제도까지 도입해서 해 보니까 분명하게 12% 정도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줄고 있고, 그걸 처리하는 비용도 연간으로 따졌을 때 13억 원 정도가 절약이 되니까 저희들은 종량제 쪽이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대안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장관님 주도하에 서울의 모 회사에 지도해서 거기 식수인원이 한 삼사천 명 되는데 쓰레기가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강성천 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장관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저희 환경부도 노력하고요. 지금 51개 지자체가 종량제 등 이른바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가능하면 내년 중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이 모두 참여해 가지고 거의 음식쓰레기를 생산하지 않을 정도 되는 곳을 분야별로 찾아 가지고, 이와 같은 곳을 각 영역이나 단위 소비 기관에, 음식 소비 기관에서 벤치마킹하도록 그렇게 하고 정부로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예산을 뽑아 보니까 내년부터 2년간 해 본다고 할 경우에 약 2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의원님이 앞장서서 많이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성천 의원** 그러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환경부장관이 얘기한 그 예산 줘서 쓰레기 줄여서 자원을, 우리가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관심을 갖겠습니다.

○**강성천 의원**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최근 청년실업은 얼마나 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청년실업률이 8.5%입니다.

○**강성천 의원** 전체 실업률보다 2배 정도 높은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무래도 청년실업의 경우에는 학교와 기업의 미스매치, 소위 불균형이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강성천 의원** 지난해 우리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이 지금 80%가량이니까 산업체로 취업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강성천 의원**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진학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등교육 이수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강성천 의원** 지금 통계에 보면 OECD 평균이 35%인데 우리는 58%로 나와 있지요? 맞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강성천 의원** 청년층은 고학력이 돼서 중소기업 일자리를 3D업종이라 하여 취업하지 않고 그 자리를 외국노동자가 대체하고 있는데 장관, 이러한 현실은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라든지 전문계고,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전문대학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정부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지금 장관 말씀이 마이스터고 같이 학생의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의원**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는 24개 교가 진행 중에 있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도 좋고 해서 지금 기업들이 소위 입도선매라고 할까요, 취업을 미리 약정을 해서 취업도 상당히 전망이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그동안 교육하고 산업현장에 괴리가 발생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강성천 의원** 그래서 지금 정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런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직업기술교육을 활성화시켜서 말씀하신 교육과 직업의 괴리를 많이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장관님, 그래서 학교와 기업의 수요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중고에서 노동의 신성함과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교육정책은 어떻게 할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교육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진로·직업이 잘 소개가 되면 반드시 대학만 가겠다 하는 풍조도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모든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진로교육 활성화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강성천 의원** 다음은 여성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이 나오셨나요?

○**여성가족부차관 김교식** 예, 차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천 의원** 차관님, 작년 여성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비해서 늘었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김교식** 예.

○**강성천 의원** 남녀 간 임금격차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김교식** 남녀 간 임금격차가 한 40% 가까이 돼서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성천 의원**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김교식** 예.

○**강성천 의원** 우리나라 남녀 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큼니다. 그리고 남녀 간 임금격차가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은 아직 모르고 있는데 그 원인과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김교식** 의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여성 인적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녀 간에 임

금액차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여성들이 학력도 높아지고 해서 3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한 80%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는데 30대 초반 들어와서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서 직장생활을 계속 못 하고 경력을 그만 두었다가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등이 불리하니까 임금 수준이 남성의 한 50%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재형 부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남녀 간에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출산 휴가에도 불구하고 경력 단절 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장기간 근속을 위해서 육아 지원이라든지 유연근무제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활성화하고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여성이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비록 단기간에 완성되지는 않지만 정부부처는 물론 경제계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천 의원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뿐 아니라 직장 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산업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걸돌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김교식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업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이용률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 등 전 부처가 합심해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이라든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 등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저출산 대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계라든지 국민들과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의원 장애인 고용률이 22.7%로 전체 여성 고용률 49%에 턱없이 모자라는데 여성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김교식 장애인들이 참 살기가 어려운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대로 직업을 못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전국에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20개소 갖고 있는데 금년에 2개소를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서는 여성장애인들의 직업 역량을 개발하고 직업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그 훈련 성과가 직업으로, 취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성천 의원 차관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과 여성 친화적 고용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김교식 예, 감사합니다.

○강성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중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와 양극화 해소 그리고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국내외적 성과를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 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으로 상임위가 파행되고 민생법안 처리 지연으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략적인 이익만 내세우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잘못된 관행을 우리는 다 같이 버려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납시다. 선동적 포퓰리즘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실질적 고용과 복지정책으로 사회양극화를 해결해야 하며 노사 상생의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국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노동가족과 모든 국민들이 환하게 웃고 노사정이 굳게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거듭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한마음이 되기를 바라며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강성천 의원님의 귀하신 말씀을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국민들께서 듣지 못한 점 아쉽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경기 부천·소사 지역위원장 비례대표 김상희 의원입니다.

물가 대란, 전세 대란, 실업 대란, 구제역 대란, 등록금 대란, 지금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의 무능 때문에 대란민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거듭되는 대통령의 거짓말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총리,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상희 의원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께 한 약속입니다.

지금 분당에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서신 강제섭 당시 한나라당 대표도 2007년 신년 담화에서 반값 등록금 법안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계속 부인하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총리, 반값 등록금 합니까, 안 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국가장학제도를 구축을 하고 또 기부금 등 다양한 대학 재원의 확충을 통해서 평균적인 등록금 가계 부담을 최소한도로 줄이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정책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장학금 확충, 든든학자금제도 도입, 또 대학 수입 다변화 등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부담 줄이겠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상희 의원 전국의 대학생들은 이는 완벽한 사기극이라며 등록금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한 66% 상승했습니다.

○김상희 의원 예, 사립대학 66%, 국립대학 83%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상희 의원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3배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세계 수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세계 2위 수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희 의원 2위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상희 의원 고등교육 국가부담률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확한 통계는 제가……

○김상희 의원 OECD 평균의 3분의 1입니다. 등록금은 2위.

총리, 최근 카이스트대 학생 자살 사태의 원인 알고 계시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다마는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등록금이 부과되는 그런 경우가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생 생활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나 고통 이런 것들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의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좀 민망하신 모양인데요, 징벌적 등록금제도 때문입니다. 대학등록금 안 내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못하면 630만 원을 내야 되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 사건은 경쟁과 효율만을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이 빚어낸 상징적 사건입니다.

총장 해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4월 15일 이사회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총장의 해임 여부, 또 총장은 나름대로 우리나라 대학교육 개혁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상희 의원 판단이 어렵습니까? 학생 4명이 자살하고 교수 1명이 자살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정확한 자살 원인 같은 것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에 합당한 사실 관계가 확정이 되고 그 기초에 의해서 책임 문제

가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의원** 총리,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자살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1년에 한 이삼백 명의 대학생이 자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상당 부분은 이런 학비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자살한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의원** 지난 2월 강릉에서 꽃다운 나이의 여대생이 학자금 대출 서류와 복권 2장을 유서 대신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목숨 끊은 대학생들이 3년간 813명입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MB 정권 3년간 7배 폭증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등록금과 여대생 알바’를 검색하면 각종 대출 사이트와 유흥업소 구인광고로 넘쳐납니다.

총리, 우리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유흥업소 기웃거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자살하는 처참한 현실에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뭐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도 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 인상을 참억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각종 장학대책을 수립을 하고 합니다마는 미흡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희 의원** 예.

등록금 대책, 대표적인 것이 든든장학금입니다.

이걸 발표하면서 대통령께서는 ‘이제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든든장학금,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용률이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김상희 의원** 민주당이 반대해도 강행한 결과

시행 첫해에 예상치의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출조건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뭐 학점이라든지 또 재산관계라든지, 이런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예, B학점 이상, 부모 소득수준, 35세 미만, 4.9% 이자에 복리 적용, 군복무 기간에도 이자는 내야 됩니다.

든든장학금으로 3600만 원을 대출받으면 나중에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예.

원금의 4배인 1억 32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총리라면 이 장학금 대출받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래서 대출이자를 낮춘다든지 하는 학생들 부담을, 차후에 이루어지는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대출 자격조건 철폐하고 그리고 대출이자를 낮춰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상희 의원** 그런데 총리, 지난해 예산 날치기 처리됐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변칙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상희 의원** 그런데 학자금 이자 지원 그리고 꼭 필요한 대학생들 등록금, 장학금, 차상위계층 장학금, 근로장학금 모두 날아갔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살려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금년에 뭐 특별히 추경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희 의원** 계획하셔야지요.

상황이 이리데 추경 안 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추경은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그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데요. 아직은 정부로서는 추경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상희 의원**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해마다 부자감세 13조, 4대강 삽질에 22조, 안보 실패로 국방비는 40조 추가 증액됩니다.

3조 원만 투자하면 등록금을 소득하위 10% 면제, 30%까지 75% 면제, 60%까지는 절반 등록금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 아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뒤 대학등록금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마는 또 재정의 효율적인 분배, 사용의 견지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에 앞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 측면만 보고 문제를 접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의원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재정 효율성 얘기하십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다음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브랜드 정책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상희 의원 총리, ‘타운돌이’라는 말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이라는 장밋빛 공약을 제시하고 한나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뉴타운 지역에 주민 갈등과 반대 투쟁이 민란 직전 수준으로 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갈등,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 ‘제가 뉴타운 하자고 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주민들과 시장님께 고통을 줘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오늘 서울시는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331개 뉴타운 구역의 해제를 검토한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총리, 뉴타운 정책은 실패한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뉴타운 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현실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다 사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그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김상희 의원 많은 의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상희 의원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성, 예전에는 이제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지금은 사업성이 경기침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해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 또 의견대립 등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구체적으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추진 현황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75개 정도 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에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만 상당 부분에서는 지금 드린 말씀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90배, 관련 인구 수 200만입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9년간 87% 착공 못 했습니다. 경기도는 163곳 중에서 3곳 지정 취소되고 지금 한 곳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진행됐던 부천 소사 푸르지오 아파트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분양 광고 중입니다. 주민들은 대국민 사기극인 뉴타운 정책을 규탄하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비대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업성이 없어서요?

○국무총리 김황식 사업성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것은 사업성입니다.

○김상희 의원 왜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사업성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 더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 문제라든지 등등의 문제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에서 부담할 도시기반시설과 주거복지 비용까지 주

민에게 부담하는 뉴타운 사업을 시·도지사가, 정부가 무모하게, 광범위하게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영세 가옥주들이 평균 65%인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분담금은 기본적으로 1, 2억씩 늘어나고 이들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깨달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 철회하고 싶어도 철회를 못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철회하는 데도 또 기왕에 투입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철회하는 데는 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이 정도인데 이 정책 실패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패라고 평가를 해도 괜찮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러면 이 실패한 뉴타운 정책,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걸 꼭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꼬집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들, 많은 사람들의 협의·의견을 거쳐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사람 또는 한 기관의 책임이라고만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상희 의원 뉴타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사업을 최초에 만들고 서울시 전역에 지정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따라서 뉴타운 구역을 경기도 전역에 지정한 경기도 김문수 지사 그리고 단체장들, 뉴타운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활용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결과적으로는 지금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간에 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 중심으로 '누구의 책임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의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정책의 실패는 정책을 세운 사람 그리고 그 정책을 밀어붙인 사람,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뉴타운 사업은 정치권이 주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정치권이, 정부가 지구 지정하고 개발비용을 영세 주민에게 떠넘기면서 원주민 재정착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뉴타운 대란에 최소한 200만 국민이 뉴타운 정책 실패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저항하고 투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할 대안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조합을 해체하거나 뉴타운 사업을 철회한다든지 뭐 등등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현재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이 되고 제도가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제도 보완이라는 것은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또다시 활성화될 여지도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의원 그런 안이한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모든……

○김상희 의원 먼저 이 뉴타운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사업 현황 평가하시고 주민의견 청취하고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원하고 사업성 있는 지역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서 사업을 빨리 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지역은 구획 재조정하고 사업 철회하고 출구 전략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정책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후화된 서민 밀집지역 재정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개발이익을 전제로 영세민에게 부담 주는 방식으로 개발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수준 고려하고 공공기반시설 공공이 책임지고 주민들은 자기 집 개량하는 방식으로 주거복지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그런 방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의원 이제는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뉴타운 문제의 책임은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 사과했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사과하십시오. 한나라당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국회 내에 뉴타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뉴타운 대책특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총리님, 원전 사태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상희 의원 원전 초기 대응 잘하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대응을 했습니다.

○김상희 의원 맨 먼저 편서풍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면서 대통령은 일본대사관 가서 위로하고 119 급파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119 급파한 것은, 그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한 사업이고요. 또 대통령께서 일본대사관에 가서 조의를 표한 것은, 그것도 인도적인 조치입니다.

○김상희 의원 사고 발생 열흘 만에 대통령은 ‘바람의 방향과 관계없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상층부에서는 편서풍으로, 서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방사능 관련 물질들이 이쪽으로 대폭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과학자들의 견해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평가나 의견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물질도 극미량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한테 은폐하거나 속이는 이런 차원도 아니고 그게 은폐한다고, 속인다고 속여지는 사항도 아니겠습니까?

○김상희 의원 어쨌든 경솔했습니다.

3일 후 방사능 물질이 전국에서 검출되었습니다. KINS는 오보라고 은폐하고 8곳이라고 축소하고 하루가 지나서 인정했습니다.

총리, 태풍이 불어오는 6월부터 오염수가 우리 연안에 온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분석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 연안으로 오기까지는 2, 3년이 걸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분석·판단도 경우에 따라서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 해역에 들어올 때는 상당히 희석이 되어 가지고 어떤,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평가와 판단입니다.

○김상희 의원 대통령도 전문가들에게 속아서 국민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총리, IAEA에서는 일본원전 폭발 가능성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대책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로서는 IAEA하고 밀접한, 회원국으로서 채널을 열어 두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전문 과학자들이 일본에 또 파견되어 가지고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일본과 우리 사이에, 과학자들,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회의, 협의도 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대책이 없군요. 어물어물, 우리 총리께서 그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그게 대책이 아니고 뭐가 대책입니까, 그러면?

○김상희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에 인접국가 원자력사고 대응 매뉴얼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상희 의원 이 매뉴얼에 따르면 지금 현재 어떤 단계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심각한 단계는 아닙니다.

○김상희 의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상희 의원 사고가 터진 3월 12일 첫날부터 최악의 정보 단계인 레드(red), 심각 단계였습니다. 이것을 모르십니까, 총리가?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매뉴얼 안 보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매뉴얼은, 매뉴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총리, 매뉴얼 안 보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매뉴얼은 안 봤지만 그 매뉴얼의 내용과……
 ○**김상희 의원** 아니, 세상에 총리가 매뉴얼을 안 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저……
 ○**김상희 의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교과……
 ○**김상희 의원** 지금 최악의 정보 단계, 레드 단계입니다, 매뉴얼에 따르면요.
 ○**국무총리 김황식** 최악의 정보 단계가 지금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은 조금 특수한 매뉴얼이다, 여기에서 어떤 매뉴얼, 어떤 성격의 매뉴얼인지 하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김상희 의원**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지금. 형식적으로.
 ○**국무총리 김황식** 특수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매뉴얼의 성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나중에 필요하면 김 의원님에게 따로 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아니, 지금 국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김상희 의원**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매뉴얼인데 그것을 왜 얘기를 못 합니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핵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내용……
 ○**김상희 의원** 총리님, 매뉴얼 보고 얘기하세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매뉴얼 만들어 놓고 서랍에서 썩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답 하시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에서는 그것을, 제가 검토해서 아직 심각 단계, 레드라고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만 일단 의원님께 설명을 올립니다.
 ○**김상희 의원**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매뉴얼에 의하면 레드 단계입니다. 레드 단계에서는 즉각적으로 상황실 운영하고 비상대응체

제 가동해야 합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정원이 현지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 운영은 고사하고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난 4월 7일에야 관계대책회의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에 각종 국무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원자력위원회 또 부처를 망라한 실무자 회의 등등을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김상희 의원** 그것은 평상시에, 매뉴얼에 있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총리는 매뉴얼도 모르고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제역 사태하고 관련해 가지고 정말 호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원전 사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열심히 챙기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종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 내에서 필요한 모든, 형식적으로 상황실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실질적으로 전 부처가 달려들어서 필요한 조치는 계속 취하고 수입 금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사능 검사를 하고 또 그러한 검사에 필요한 기계가 부재한 부분에서는 전부 수합을 하고 하는 계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희 의원** 왜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제대로 가동시키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작동을 한 겁니다.

○**김상희 의원** 총리님, 저한테 지금 다른 얘기 하고 계십니다.

총리, 매뉴얼에 보면 국정원·외통부 정보 수집하고 다 이것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청은 학생 보호를 위해서 재량 휴교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매뉴얼대로 하지도 않고 우왕좌왕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정작 지침대로 한 교육청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90% 이상의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총리, 중국에서 원전 사고 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중국에서 만약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의원** 15시간도 안 돼서 남한 전역을 방사능이 뒤덮게 됩니다. 188기의 원전을 추가로 계획하는 중국에 대해서 대비가 있습니까? 회의 한 번도 안 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한국과 일본·중국 간에는 물론 IAEA 회원국으로서 서로 간에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중일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보 제공을……

○**김상희 의원** 회의 한 번도 안 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정보 제공의 협약에 따라서 정보 제공 의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는 미흡하겠다, 보다 더 철저한 서로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로서는 한중일 간에 더 특별한 협의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고에 대비할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국내 대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전 사고가 나면 주민구호소, 방사능방재센터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가 대책이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방사선 방호약품으로 중앙방사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또 진료하는 등 주민보호 조치를 강구를 하고 모든 상황에 대처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총리께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전체 지금 구호소가 1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3개가 지금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구호소? 방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구호소?

모르시지요? 방진 설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진설계는 113개 중에서 12개만이 내진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으로부터 10km 범위의 국민을 소개(疏開)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정책, 대책입니다.

일본, 30km까지 지금 소개했습니다.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지자체의 역할 중요하지요, 사고 나면?

○**국무총리 김황식** 예, 중요합니다.

○**김상희 의원** 원전 근처에 있는 지자체, 방사능 전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이것은 이번 후쿠시마 사건

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의 원전 사고에 대한 대책이 어느 상태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다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의원** (방독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뭔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방독면 같습니다.

○**김상희 의원** 이번에 주민들에게 배포한 방독면입니다. 이것은 전쟁용 독가스 방지용이지 방사능 방지용이 아닙니다. 이것 주민들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원전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미흡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을 하고, 누대의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대비를 못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이번 사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원자력발전소, 특히 노후한 원자력발전소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리 1호기 당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폐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하튼 4월 22일까지 안전점검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위해서 중단을 시키고 그리고 과학적인·객관적인 검증에 따라서 가동 여부라든지 하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여하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하튼 안전성이다 하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정치적인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숨기고 은폐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희 의원** 점검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수명

다한 고리 1호기, 월성원전 폐쇄하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고리 1호 원전, 30년 되어서 연장할 때 IAEA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이 다 절차를 거쳐서 행해진 문제입니다.

○김상희 의원 일본 원전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율을 6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신뢰를 잃으면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 기흥 출신의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俊宣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출신의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과연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 6·25 때 거창 양민 학살사건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다.

○朴俊宣 議員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6·25 전쟁 중에 지리산 일대의 공비 토벌작전 과정에 있어서 수행 중이던 군 병력이 경남 거창군 주민을 잘못 희생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朴俊宣 議員 양민이 억울하게 한 700여 명이 희생당한 불법적인 사건이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朴俊宣 議員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련자들이 처벌되고, 그중에서 피해자 700여 명 중에서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400여 명이라는 것도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많은 양민이 억울하게 학살되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朴俊宣 議員 96년 1월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들의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됐는데, 2004년 3월에 16대 국회 때 피해 배상,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 배상을 규정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朴俊宣 議員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2008년 7월에 국회에 제출되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정부에서는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실 건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국무회의든지 내각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朴俊宣 議員 기획재정부는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현재까지 이 거창사건의 경우에 피해배상액으로 예정된 것이 한 860억 원, 그리고 산청·함양까지 포함하면 1500여억 원, 그리고 6·25 관련 사건 전체를 포함하면 25조 원 정도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된다, 그래서 곤란하다’ 이런 취지인데 이 정부의 이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 하는 이 정책기조, 맞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억울한 분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응은 그 명예회복 조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재정 여건과 또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쪽이다 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朴俊宣 議員** 본 의원은 우리 총리님과 여기 뒤에 계신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국가는 공무원들로, 군인, 공직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돈이 들더라도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사건을 포함해 가지고 국가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천문학적 돈이 들더라도 배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 부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국가 배상을 못 하겠다,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억울하게 희생된 분에 대해서 명예회복도 되고 또 응분의 보상도 되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국가가 재정 여건을, 또 관련되는 사건들과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俊宣 議員** 물론 맞습니다. 총리의 입장도 맞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배상의 어떤 실현 이런 것들은 재정 부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를 비롯한 정부에서 매우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 문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정부로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朴俊宣 議員**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는 우리 광역교통을 위해서……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저기는 어디냐 하면 경기도 용인시 저희 지역의 보정 전철역 앞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에서, 용인 각지에서 와서 전철을 타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무단횡단하고 그러는 모습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버스를,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루를 준비하는, 출퇴근이 아니고 흡사 전쟁과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보좌진들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총리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을 때 저 보정역, 그다음에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주요 교통요지에서 새벽 6시 반에 후보자 명함을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근 전쟁을 하는 분들한테 명함을 드린다는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명색이 정치를 하고 국가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이 또는 과거의 국회의원들이 저런 교통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하는가, 과거의 국회의원들과 과거의 시장과 과거의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분들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서울 강남에 살겠지요. 하지만 형편이 부족해서 경기도 신도시에 이주를 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저런 전쟁을 치르고 하루를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출퇴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겠습니다.

○**朴俊宣 議員** 분당 연장선 사업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朴俊宣 議員** 이 분당 연장선은 강남에서 출발하는 분당선이 용인 수지-기흥 그리고 수원까지 가는 전철입니다. 이게 용인 동백 그다음에 수지·죽전·구성·흥덕·영통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정부에서 2008년도 말까지 개통하기로 약속한 전철입니다.

총리,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朴俊宣 議員**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출마한 게 2008년도 4월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2008년도 말 개통은 불가능하다, 왜냐? 한 3~4년 동안 예산이 1000억씩 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300억, 500억, 200억, 찢끔찢끔…… 그 예산 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유로 국비가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철이 개통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 18대 국회 들어와서 제가 1450억씩 3년간 해서 올해 말에 개통이 됩니다. 용인시비 310억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사를. 화면 좀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입니다. 저것이 2004년도와 2005년도의 기사들입니다. 당시의 신문기사, 광고 이런 것들인데요, 저것이 정부에서 2008년도에 분당 연장선을 개통한다고 하니깐 그것을 신문에서 보도하고 그다음에 분양업자들은 광고를 띄운 겁니다. 그리고 순진한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용인시로 거주하기 위해서 이사 온 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집을 사고 빚내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말이면 개통이 될 것으로 믿고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서울까지 출퇴근 전쟁을,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2008년도 개통 안 됩니다. 2009년도 개통 안 됩니다. 2010년도 이미 지났는데 개통이 안 됐습니다. 이제서야 2011년 말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시민들은 국가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자기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이주를 하고 삽니다. 무려 3년간, 3년이면 365 곱하기 3입니다.

매일 저런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과연 행복했겠습니까, 불행했겠습니까?

총리님!

국가는, 정부는 그리고 공무원들은, 여기에 있는 우리 정치인을 포함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분당 연장선 사업은 이제 바야흐로 제자리를 잡혀 가지만 이런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신도시 만들고 주민들 입주시켰는데 전철이 개통 안 되고 버스는 저 지경이고……

우리 총리께서 대한민국의 대법관·감사원장 하시고, 총리 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장관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을 독려를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朴俊宣 議員 탁상에서 서류 1장이 미루어지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고통받고, 예산에 관련된 약간의 불일치가 1년, 2년 국민의 고통을 야기합니다.

경전철 아시지요, 용인경전철?

○국무총리 김황식 예.

○朴俊宣 議員 95년 8월 분당 연장선, 아까 말씀드린 분당 연장선이 2008년도 말에 개통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용인 기흥에 있는 구갈역부터 에버랜드까지 경전철을 검토하라는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서 용인시에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2010년 6월에, 작년 6월에 완공이 됩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용인경전철이 수요 예측을 1일 15만 명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의 승낙을 받아 냅니다. 국토해양부는 검토해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 예측을 해 보니까 일일 3만~5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7200억 원의 민자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MRG 계약, 지금은 없어졌지만 손해전보계약을 했습니다.

운행을 하게 되면 용인시에서 하루 2억 원, 1년이면 550억, 30년간 약속을 했기 때문에 1조 6500억 원을 물어줘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책임 안 집니다. 경기도도 책임 안 집니다. 용인시민의 세금으로 1조 6500억 원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용인뿐만이 아닙니다. 김해도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경전철 많이 지어 냈지요? 중앙정부에서 승인해 줬는데 모든 것은 다 지자체로 넘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김정권 김해 국회의원께서 국가에서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는 책임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권한과 책임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연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朴俊宣 議員 검토 필요하지요.

우리 지방자치 시행된 이후에, 지방자치제를 시행했는데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분산이 안 됐습니다. 권한은 서로 싸우고, 서로 가지려고 하고, 책임은 서로 미룹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권력을 이양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중앙정부의 심의라든가 일부

관여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잘못됐을 경우에 이미 그 공무원은 퇴직하고 그 시장, 자치단체장은 없어졌습니다. 그 1조 6500억 원에 대한 세금은 현재 용인에 사는 시민들, 김해에 사는 시민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국가는, 중앙정부는 책임이 없나?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좀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근본적으로는 여하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朴俊宣 議員 물론이지요. 일차적인 책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나, 이게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동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사업이 그야말로 무책임하게, 또 관련되는 수요 예측 같은 것들을 과장되게, 의식적으로 했던 고의적으로 했던 과실로 했던 간에 그런 사태들이 많이 지금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과연 중앙과 지방의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등에 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마는, 정부로서도 한번 검토는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책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 일을 했던……

○朴俊宣 議員 지금 총리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권한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지요.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결국은 그런 시민들의 부담이 될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통제를 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담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버스 타시는 걸 봤는데 결국은 전철을 못 타면 광역버스를 타고 옵니다. 광역버스 노선을 하나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朴俊宣 議員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일산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버스가 많이 들어오면 혼잡해진다 해서 거의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과 경기도는 하나의 메트로폴리탄이고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이라든가 수원·화성·분당·판교·일산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버스 한번 타기가 정말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노선을 결정해야 된다는 그 법률 개정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행령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혹시 총리, e-버스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들어봤습니다.

○朴俊宣 議員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노선버스 정규 버스가 출퇴근을 하는 저 대다수의 경기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성에 안 차고 저렇게 비싼 돈을 내고도 좌석이 없으니까 인터넷의 사업자가 전세버스처럼 주민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전세버스를 대서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를 그것은 불법이다 해서 운행중지 명령을 내렸습시다.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총리?

○국무총리 김황식 여하튼 여객 운송 질서를 잘 관리하기 위해, 확립하기 위해서 여객운송 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현행법을 해석을 하면 그러한 해석밖에 나올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주민들 편의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다만 현재의 상태로서는 그건 합법이다 하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朴俊宣 議員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합법화하는 법률을 낼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공무원이 국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고 법을 고치도록 노력하고 행정 집행을 해야지, 국민의 편의보다는 버스업자라든가 아니면 현재의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국민들이 정부에서 알아서 광역교통버스를 마련해

준다면 뭐 하러 인터넷 검색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총리를 비롯한 건교부장관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용인에서 출퇴근하고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책을 논하고 법률을 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법의 해석에 있어서 탄력성 있는 법 해석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현행법에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법을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현실적 필요성 문제, 그리고 여객 운송 질서에 어떠한 흠이 생기는지를 고려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俊宣 議員** 공무원이 국가를 대신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때 단순히 판결문 쓰는 법원의 법관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다가 국민이 불편한게 생긴다면 결국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법을 고치기도 하고 해석을 유연하게도 하고 그러려는 노력 그것을 한다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런 공무원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저는 문제 삼는 것이 이 한 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대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를 비롯한 우리 국무위원, 공직자들이 대오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저도 박 의원님의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도 평소에 그야말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 법은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해석이라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소요가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고 제 소신이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강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래도 명백한 법률의 문제가 생길 때에는 개정을 통하지 않고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그런 한계도 있으니까 또 법률 개정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俊宣 議員** 마지막으로 전·월세 문제를 비롯해서,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월세로 인해

서 국민이 고통받는다면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정부가 시장에 맡겨 놓겠다고 하는 자세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정부,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셔야 했습니다. 방사능비가 내리지 않을까, 이것이 혹시 무슨 위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무척 걱정스러우십니다. 저는 오늘 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질문을 총리께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대통령께서 3월 14일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 발언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국민이 일본 방사능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유언비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맞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상학자라든지 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신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 의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두고, 국민의 걱정을 두고 ‘유언비어다’ 그리고 ‘근거 없는 소문이고 비과학적인 억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말아야지요. ‘내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니 이렇다더라. 그런데 정부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시점에서는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아마 이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도 과학자들 의견을 그냥 믿고 또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총리님,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셨다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국민들은 과학자들이 또 그

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여하튼 초유의 불안한 사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불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의원** 그런 경우가 90%를 넘었지요? 그리고 이미 방사능이 지금 우리 한국, 오늘도 바로 전국에서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학자들의 말씀이 틀린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왔느니 안 왔느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인체에 얼마만큼 유해한 양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희 의원** 저는 적어도 대통령께서 그리고 총리께서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유언비어로 몰아붙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특히 안전 문제하고 관련되어서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더군다나 자신과 다른,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론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이것은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유언비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훨씬 더 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사회 일각에서 아무 근거 없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학술적인 토론을 한다든지 하면 좋지만 그러나 확실한 근거 없이 또 일부러 장난스럽게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분들도 함부로 뭐라고 그럴까, 책임이 없는 그러한 행동이나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부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보다 신중하게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합니다. 장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책임 있게 행동하십시오.

시정을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대부분의 국민은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와 같이 바로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히 일부 그런 사

람들이, 책임감 없게 처신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존중을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정부가.

아까 가동 연장되고 있는 고리 핵발전소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IAEA의 안전검사를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정희 의원**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번에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원래 설계수명일이 언제까지였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도 한 30년 됐지 않습니까?

○**이정희 의원** 설계수명일이 2001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이미 다 마쳐진, 끝난 원전들입니다. 그 핵발전소에 대해서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IAEA의 안전검사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고가 일어났지요? 누구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조차도, 그 안전하다고 하는 그리고 그 철저한 일본조차도 이랬다면 그 누구도 이제 원전의 안전성을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가동 연장한 원전 안전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원전 전문가들한테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30년은 지났지만 그걸 연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부속을 교체를 하고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현재 한 20년 된 원전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고리 원전은 지금 수명 연장됐고, 월성 원전은 설계수명 연장 언제 결정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한 1년 후에는 해야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원래 내년 11월까지 설계수명 만료되지 않습니까? 올해 6월에 결정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정희 의원** 지금 그 연장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국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지역주민들은 그 수명 연장에 대해서 과연 공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안전한지 아니면 불안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공개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구체적인 위원회는 알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나 민간인들의 의견도 정말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철저한 절차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민간 전문가와 주민에게 그 검증의 전 과정을 공개한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절차를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취지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에 의해서 그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정희 의원** 배심원 제도 같은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불안해합니다. 절차적인 투명성을 분명히 갖추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절차적인 투명성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예, 화면을 좀 보시겠는데요. 핵발전소 반경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고리 그리고 월성 이렇게 원전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 고리 원전은 지금 30km, 즉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지금 30km까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30km가 부산의 해운대 그리고 광안리 해수욕장이 들어갑니다. 부산 서면이 모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포함된 핵발전소 반경 30km 내에 인구 372만 명이 삽니다.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로 원자로가 있지요. 연구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포함하면 608만 명이 30km 반경 이내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로 원자로 비상계획구역은 8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도 그 지역 주민 누구에게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오직 연구원들만, 그 연구원 내에서 대피하는 것이 그 계획의 전부입니다. 충분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검토를 해서 안전조치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잘 밝히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제가 중국 원전의 지금 계획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중국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발전소 현황을 그림으로 보시면 한반도가 지금 핵의 고리에 싸여 있습니다. 일본 그리고 중국 현황과 건설 계획입니다.

우리 홍희덕 의원님께서 공개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동아시아 장거리 대기확산 모델의 연구개발 선행연구를 보면 중국 중서부 핵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 2일 만에 한반도 서해안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3일 만에 한반도 전역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예방 조치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위험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 일본, 중국이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떤 사고에든지 서로 간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인력의 교류·파견이라든지 또 안전에 관한 문제들을 서로 체크를 한다든지 하는 각종의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여하튼 일본, 중국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사고가 나면 어떤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단계별로 가볍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치료든지 또는 병원에 입원해서 분리·격리해서 치료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단계적인 대책은 세우고 있고 또 병원을, 병실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총리님, 그렇다면 핵발전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 정책의 변화가 중국의, 일본의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원자력이 가지는 장점, 따라서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첫째는 안전성이고, 안전의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고 그리고 핵발전, 원전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토대 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또 원전 정책을 앞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이걸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세계의 동향을 봐 가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을 전제로 기왕에 가졌던 원전 정책은 추진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정희 의원** 총리님, 집에 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오셔서 끄면 됩니다. 이 불은 원자력, 핵발전, 불이 꺼집니까? 못 끄고 있지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과연?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컨트롤이 되고 사고 발생을 예방을 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검토되어 가지고 그런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정희 의원**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른바 1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후쿠시마에 사고로 일어났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과학자가 책임집니까, 정부가 책임집니까? 그 과학자가 책임지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

○**이정희 의원**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가 참 에너지를 사용 안할 수 없고 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감내하는 정책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전 에너지에 대처하는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이 어떻게 개발·발전되느냐, 그걸로 또 충분히 커버가 되느냐 하는 등등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지금 현재 34%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원전을 하루아침에 또는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폐쇄했을 때 생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국민적인 혼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하는 것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여하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 의원** 총리님, 그러면 이걸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5년간 핵발전 연구개발과 홍보비용에 쓴 정부 예산이 5년간 1조 4330억 원이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그 절반 수준인 8770억 원이었습니다. 이 비율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더 많은 돈 투자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또 지원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전에 못지않게 의욕적으로 비율을 높여 가야 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R&D나 또는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가는 정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 의원** 총리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핵발전 홍보를 전담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기관이 한 해에 평균 100억 원 내외의 비용을 씁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쓴 돈을 따져 보니까 433억 원입니다. 홍보합니다. 광고합니다. 이것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로 돌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예산이나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원자력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그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획을 취소·중단한다면 몰라도 그것을 정책을 밀고 나간다는 그런 전제로 한다면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리고 하는 노력도 또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맹목적으로 위험성을 감추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의원** 지역 주민들은 이 원자력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늘 ‘깨끗하고 안전한 원전’ 이 한마디밖에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잘된 홍보겠습니까? 잘못됐지요? 총리님께서도 이걸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어떤 점을…… 홍보 관련요?

○**이정희 의원** 예, ‘깨끗하고 안전한 원전’ 이 한마디로 홍보가 끝나는 건 바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벌써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적어도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몇 마디 구호로써 홍보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 의원** 저희 민주노동당이 2050년 핵발전소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 20%까지 늘리면 된다, 이미 다른 나라도 그 정도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전력 소비 절약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2050년까지 지금 있는 설계수명 그대로 다 하고 그리고 더 짓지 않으면 됩니다.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도 좀더 논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의원** 총리님, 실제로 지금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이 2007년 현재로 297만t입니다. 나머지는 더 채굴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채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정도 가지면 43년 쓰면 끝납니다. 아무리 더 많이 채굴 비율을 3배 늘려서 쓴다고 하더라도 79년 쓰면 더 이상 쓰지 못합니다. 2050년이면 원자력 우라늄 매장량 자체가 이

미 고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2050년이면 끝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원자력 우라늄 매장량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서는 현재 사용량 기준으로 해서는 앞으로 한 300년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것은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또 에너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봐 가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의원** 제가 OECD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께서 아마 잘못된 자료들, 과장된 부풀린 자료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 세계 우라늄 확인 매장량은 540만t이고 추정 매장량은 약 1040만t으로 파악을 하고, 그래서 현재 사용량 기준으로는 약 300년 사용한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 자료입니다.

한번 의원님 자료하고……

○**이정희 의원** 자료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 추정 매장량이라는 것은 채굴 비용이 너무 비싸서 경제성이 없어서 쓸 수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문제 걱정된다고 하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정희 의원** 그렇다면 지금 적어도 일본에서 사고가 생겼지만 후쿠시마 사고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액이 발생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걸 다 책임지지도 못합니다.

지금 보충배상협약이 국제협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비준 발효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먼저 여기에 가입해서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이것의 기준에 맞게 고치고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사업자가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시는 국제원자력손해배상 보충협약에 대한 우리 주변국들의 동향

이라든지 또 원전사업에 미치는 영향, 또 국가분담금 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가입 여부를 여하튼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 의원** 지금 이 상태로 놔두시면, 이제 고리에 12개의 원전이 들어가는데 심지어는 2002년에 개정할 당시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오히려 배상액이 떨어지는 수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핵안보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핵의,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문제가 하나의 의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제적으로 이러한 핵의 배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핵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에 대해서 정부가 의제를 주도하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내년에 열리게 되는 핵안보 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는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이용한 테러 방지에 주된 목적이 있는 회의입니다.

그러나 그 차제에 지금 현금에 생긴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원전의 안전 문제 같은 것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우리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이 3월 22일 나온 뒤에 취득세 50% 인하 방침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반발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저희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가 보는 게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2조 정도 세수가 감소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실제로 이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일단 아시는 대로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부 보전하는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어떤 금액에서 보전을 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것은 일단은 지방채를 발행을 하도록 하고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지방의 지금 재정 상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모두 다 감싸

안는, 이자까지 정부에서 보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전액이 지방채 발행입니까, 2조 전체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렇습니다.

○**이정희 의원** 정부의 이자 부담이 결국 늘어나겠군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것은 정부가 어차피 부담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러면 지금 아무리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세수 전체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으신 거네요, 그리고 정부의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고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세수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부 다 부담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시다마는.

○**이정희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가 부담을 하는데 그 정부는 어딘가에서 또 빼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재정을?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공적자금관리기금, 공자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지금 다…… 공적자금상환기금도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렇습니다.

○**이정희 의원**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은 지금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더라도 전체의 43%가 소비세라는 것이고요, 전 국민이 내는 돈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부동산도 한 채 없는, 집 한 채 못 가진 분이 전 국민의 50%인데 이 분들은 평생을 집 한 채 사려고 애쓰고 그리고 취득세 한 번 내볼 기회라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결국 집 사는 분들의 세금을 대신 대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형평에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런데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게 국가 정책적 목적이니까 지방세수 감소분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그 지자체에 대해서 정부 지원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을 먼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9억 원 초과주택 소득자가 전체의 한 1%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9억 원 이하 주택취득자도 이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부자를 위한 그러한 감세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정희 의원** 전 국민의 50%가 집이 없는데요. 그 아래의 50%를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중부세 감소 현황을 제가 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12월에 중부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2009년에 중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58%가 줄었습니다. 실제로 광역자치단체보다도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26%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악영향이 훨씬 더 컸습니다.

부동산정책이 원래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줄이고 이런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부세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고, 더군다나 지금 취득세 문제가 다시 불거지니까 문제가 생긴 것인데 차제에 재산세를 높이시든가 중부세를 정상화하시든가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중부세 문제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2008년도에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다 하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부세가 그 후에 대폭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수가 급격히 감소돼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에 정부가 많은 고민을 했고, 국회하고도 많은 논의를 해서 결국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일단 보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계획으로는 2013년부터 현재 5%인 지방소비세는 10%로 다시 올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더 어렵지 않도록 정부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지방소비세 역시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세율 자체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이정희 의원** 결국 전체적으로 국가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빛이 늘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

니다.

○**이정희 의원**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빛을 어떻게 줄일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지방 자주 세원을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것은 지방세제를 개편해서 지방세원을 늘려 나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정희 의원** 그렇다면 재산세를 더 높이시고, 중부세를 정상화하십시오.

들어가지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워낙 지나간 일로 치부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산출세액을 일일이, 2008년 중부세 감세 이전 그리고 감세 이후를 일일이 산출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중부세 감세 전에는 실거래가가 한 23억 원, 공시가격으로 하면 20억 원인데요, 이렇게 주택을 보유하면 1210만 원의 중부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감세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저희가 따져 보니까 20억 원 공시가격인 경우에 중부세 산출세액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128만 원. 너무나 엄청난 감세입니다.

제가 그다음에 산출세액을 하나 더 보여 드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당시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항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당시의 중부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요.

○**국무총리 김항식** 세대별 합산 과세가 문제가 있고, 또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또 소득 없는 고령자에 대한 배려 등 그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또는 불합치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개정된 종부세법이 그 법의 취지보다 더 들어간 것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또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또 입법정책을 가지고 해 나간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정확히 맞춰야 되는 그런 부담은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당시의 세율이 1%대에서 원래 3%까지였는데 0.5%에서 2%까지로 줄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그리고 이전에 고등법원도 명시적으로 그 3%의 세율이라는 것은 지나친 세율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종부세법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 발의의 취지는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자, 그래서 제가 산출세액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세대별 합산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공시가격 20억 원을 하나 산출세액이 528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2008년 감세 이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전국에 12억 원 이상 주택, 종부세 대상 주택의 분포 현황을 보니까 수도권에 있지 않은 주택은 289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통계를 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실제로 강남 3구, 그리고 용산, 분당에 종부세 대상 주택의 전체의 92%가 몰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불균형이지요.

총리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 실효세율 산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산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정희 의원** 정부가 자료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1세대 2주택의 경우요?

○**이정희 의원** 1세대 1주택, 1세대 다주택에 대해서 보유세 실효세율 자료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희 의원** 정부가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금만 깎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외국과 비교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외국과 비교해 보면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1.5%에서 1% 수준을 가지고 갑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시다시피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된 세율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세율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지만,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결코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정부의 입장이 없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종부세에 대해서?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의 입장은 지금 현재 개정돼 있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체계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정희 의원** 재산세를 통합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 중앙과 지방,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 의원** 빛을 내서 취득세 인하분을 보전해야 될 상황이라면 보유세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종부세를 올리십시오. 그것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시한이 원래 2008년까지였는데 2016년으로 늦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 역시 늦춰진다고 합니다.

2004년 협정을 국회에 보고할 당시에는 5조 4000억 원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발표는 8조 89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개정에 대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것은 정식 조약의 절차를 밟아서 헌법 60조 1항에 따라서 개정 자체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총리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부분이 국회의 동의

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확인 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희 의원 들어가십시오.

지금이라도 사회적인 형평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의문과 국민의 걱정을 유언비어로 매도하지 않는 그런 책임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의화 이정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남 밀양 창녕 출신의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늦게까지 경청해 주시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밀양시 창녕군 지역구의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입니다.

총리님 고생 많으신데 잠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저 사진 잠깐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 장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지난번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 발표하고 나서 허탈감 또 상심한 마음을 달래지 못해서 매일 밤마다 촛불을 켜두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 옆에 있는 사진은 한전의 76만 5000V 초고압 송전사업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70, 80 넘으신 고령의 할머니들이 연로한 몸을 이끌고 나오셔서 중장비하고 대치해서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오늘 우리 지방이 처한 현실과 또 지방을 보는 정부의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대비적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지방에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인색

하고 손에 쥐어 준 것마저도 도로 빼앗아가 버리고 나쁜 것은 정부의 공권력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강제로 지방에 떠안기는 것, 이것이 오늘 지방이 처한 암울한 현실이고 지방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지방이 살기 위해서 산업을 세워 달라고 그러면 제대로 된 국제노선을 가진 국제공항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기업이 안 들어오려고 한다, 보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지방의 산업수요가 없다, 만들어 놓아도 적자다, 이렇게 뽕뽕이를 돌립니다.

지방을 골병들게 만드는 악순환의 논리입니다. 지방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지방은 희망이 없으니까 능력껏 보따리 싸 들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도 고향에 정붙이고 살아가야 하는 지방 사람들이 들을 때는 가슴에 피멍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신공항 백지화 발표하면서 산업적인 기반, 경제적인 수요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나 15년 기한을 잡고 지방에다 대대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해서 그만큼 세월이 지나면 지방도 그런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필요한 시절이 오도록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총리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먼저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약속했던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중앙과 지방의 서로 균형적인 발전, 국가의 정말 중요한 과제다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신공항 추진 백지화 관련해서는 단순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경제성 논리보다도 현재 건설·항공기술로는 후보지가 안고 있는 환경 훼손이나 공항 운영 및 경제성 문제 등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쪽이 적지가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의원 그 말씀은 정부가 2005년부터 정식으로 정부 정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2009

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미룰 때까지, 한 번 예정된 입지 선정을 미룰 때까지 아무 차질 없이, 문제없이 진행해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납득이 안 됩니다.

신공항 백지화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청와대 관계자가 했던, 언론에 보도된 말이 ‘부산역에서 인천공항까지 KTX로 2시간 걸리는데 무슨 공항이 필요하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3시간 걸리고—300km KTX로—거기에서 갈아타서 인천공항까지 가면 4시간, 5시간이 걸리는데 지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그런 헛소리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합니까? 대통령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까?

총리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누가 그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다만 동남권 지역 주민의 공항 이용에 대해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고 그 정책 중의 하나가 잘 이루어지면 접근하는 시간이 최소한도로 단축될 수 있다 하는 그 점을 강조한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해진 의원** 지금 말씀 인용해 드린 것은 주요 신문 1면에 난 기사이고요, 그리고 백지화하고 난 뒤에 성난 민심을 무마하느라고 또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게 뭐가 하면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로 지금 3시간 걸리는데, 대구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50분,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이것을 앞으로 KTX를 놔 줘 가지고 부산역에서 인천공항까지 바로 2시간, 그리고 대구에서 인천공항까지 바로 1시간 반 걸리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또 그 신문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지금 300km로 달려도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시속 600km로 달리겠다는 이야기이고 돈을 들여서 새로 KTX를 놔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속 600km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것 깔 돈이면 신공항 짓지, 왜 KTX 새로 까는 것은 그렇게 쉽게 약속을 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기존의 인천공항철도 노선과 KTX 노선을 연결하고 하면 인천공항까지 부산이나 대구에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조 단위로 들거나 그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노력을 하면 2시간 41분, 대구에서 인천공항까지 2시간 15분 이런 통계, 이런 자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자료들이 무슨 의미로 영남지역 주민들의 서운한 감을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하튼 밀양과 가덕도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었다는 평가와 판단이고 어떻게 하면 공항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각종의 정책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해진 의원** 정부가 바람을 잡고 일부 언론에서 여론몰이를 한 적지가 아니다라는 논리 중의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울진공항이 적자이고 양양공항이 적자이고 청주공항이 적자인데 또 그런 적자공항을 짓겠다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지방 사람들은 정부 살림은 생각도 안 하고 빚더미가 될 것이 뻔한 그런 공항 하나 더 지어 달라고 떼쓰는 그런 무책임한 지역 이기주의자들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우리 영남만 하더라도 그런 소위 말하는 동네 공항, 국내선 많습디다. 김해공항, 울산공항, 사천공항, 포항공항, 대구공항, 예천공항도 있었는데 문 닫았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공항은 정부가 새로 하나 지어 주려고 그래도 우리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은 그런 동네 공항이 아니고 제대로 된 국제노선을 갖춘 대한민국 제2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북아 허브 국제공항이었고 정부가 약속한 것도 그것 아니었습니까?

동네 공항 하나 더 지어 준다고 한 일도 없는데 백지화하기로 정해 놓고 논리를 어거지로 맞추어서 여론몰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동네 공항하고 비교를 하고 신문들은 그것을 받아서 대서 특필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그것 국민 속이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양양공항이나 울진공항하고 똑같이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경제성의 측면에서 거기도 경제성이 나온 것처럼 이것도 여하튼 0.7, 0.73이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도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지 평가를 했던 것은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다고 한다면 우선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항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작업을 했던 것인데 그 진행 결과로서 말하자면 항공 운항관계라든지 공항 운영관계라든지 환경 훼손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더 고려해 볼 때에 경제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점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적지는 아니라는 평가이지 결코 영남지역에 공항이 필요없다든지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의원 이번의 동남권 신공항은 제가 보기에는 뼈 속까지 수도권 논리에 젖어 있는 정부와 정치권과 언론의 삼각파도에 신공항이 침몰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공항이 좌초된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수도권 정부이고 언론도 수도권 언론이고 정당도 표를 얻을 때는 지역정당이지만 국정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또 국가 재원을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철저하게 수도권밖에 안 보이는 그런 외눈박이 정당이라는 것을 저는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과 관련해서 정부가 첫 번째로 잘못된 것은 멀쩡하게 제대로 진행돼 오던 사업을 선거 논리, 정치 논리에 휘둘러 가지고 백지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방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B/C라는 것이, 지난주 대정부질문 때, 아니, 이번 주인가, B/C 0.5도 안 되는 사업들을 수도룩하게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최소 0.7이 넘어가는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경제성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앞뒤 안 맞는 구차한 논리로 백지화시킨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정부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침대로 짜 맞추다 보니까 평가를 하기 전에, 채점도 하기 전에 정부 관계자가 점수가 미달이어서 백지화한다고 발표해 가지고 너무나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줘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이런 속 보이는 행태가 똑똑한 국민들이 볼 때는 정부가 너무나 어설피고 실망스럽고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백지화를 하더라도 지방이 갖

고 있는 고충과 애로와 미래가 안 보이는 이런 아픔에 대해서 끝까지 고뇌하고 번민하면서 그 해법을 찾아보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마지막까지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 정부의 의식 없는 모습, 철저하게 수도권 정부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방에서 볼 때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한 것, 그것이 저는 정부가 큰 잘못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장관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모든 욕을 대통령이 뒤집어쓰게 만들고, 그런 도덕적으로 파탄된 파탄 상태의 모습을 보여준 것……

그런데 그런 장관이 이 정부에서는 최장수 장관이라고 하는 신기록을 세우게 만드는 우리 정부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여러 가지 상황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오히려 조 의원님을 더 화나게 하는 이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요컨대 조 의원님을 비롯한 영남지역 주민들의 모든 아픔 이런 것은 정부가 잘 떠안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섭섭한 감정을 해소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코 중앙과 지방이 이렇게 분리되고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국가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과 그리고 좀더 지방의 아픔을, 또 이번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하나 하나 이렇게 풀어 나가면서 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그냥 제 일일이 대응하는 것에 대신을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신 그 765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 이것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한전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765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저 남쪽의 신고리 원전에서부터 발전을 시작해 가지고 수도권까지 전력을 보내면서 국토를 종주하는 모든 구간에서 수많은 지방과 마을과 주민들에게 전자파 불안을 안기고, 재산상의 손실을 강요하고 또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 마을을 폐허로 만들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황폐화하면서 지방을 활취고 지나가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주민들은 보상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평생을 살아온 그런 마을 공동체와 자기의 삶의 보금자리 그것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또 피땀 흘려서 일구어 온 다락의 그 몇 평 안 되는 논·밭떼기 그거 지키고, 전자파 불안을 생전 알지 못했던 그 시절 그 평온한 일상,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깨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지켜지기를 바라는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민들에게 한전은 이 사업을 왜 필요하지 설득도 못 하고 보상제도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 계획에만 쫓겨 가지고 공사 강행만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러 온 인부들을 막기 위해서 칠팔십이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산꼭대기에 지팡이 짚고 올라와서 며칠째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탁 막힙니다.

그분은 국회의원인 저한테 도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려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는 게 아니라는 말, 절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무력감도 있지만 정부도 한전도 고민도 하지 않고, 해법도, 해결하지 않고 현장의 인부들만 뒹달해 가지고 자기 나이 든 부모님과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몸싸움하게 만드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지금 한전과 정부가 보여 주고 있는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 현장에는 정부도 한전도 없고 전기톱 들고 불도저 가지고 나와서 나무 베고 도로 닦는 인부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대치하고 서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그게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정의화 부의장, 박희태 의장과 사회교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전탑 건설, 송전 관련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발전전력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또 충분한 보상을 하고 또 어떻

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당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 등 또 정부기관과 여러 가지 협조 방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 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노력의 일환에서 주민들이 양해를 하고 또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전제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그 상황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이 지금 5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부나 한전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괜찮으시다면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리고 직접 한번 보시고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수준, 정부와 한전이 일하고 있는 수준이 어떤 현실에 있는지 한번 보시고 총리로서 해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보상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되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원론적으로는 주민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삶이, 일상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어느 보도에서 나왔었지만 전력연구원에서 세계 최초로 최고 성능의 초전도선을 개발했다고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초전도케이블을 이 정도로까지 발전시켜 봤는데 한전은 그것을 상용화하는 것을 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능하다 그래도 안 한다고 억지 부리면서 그냥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중재를 서기 위해서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전까지 참여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해서 피해 정도를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또 전자파 피해도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해 보자고 합의해 놓은 상태인데 공사는 공사대로 강행해 밀고 들어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전력 송신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고 또 발

전소 건설에 맞춰서 송전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역산을 하면 공사가 지금부터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송전은 주민들이 허용을 해 주시고 그 대신 그에 따른 피해는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 관심을 갖겠고, 또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그런 소위 초전도케이블 기술 추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실증연구 단계이고 그것을 상용화한 예가 없다고 그러합니다.

○**조해진 의원** 미국에 한전이 수출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미국이 롱아일랜드 LIPA 프로젝트에 아마 그런 실험이 있는 것으로, 그것은 상용화보다도 하나의 실증연구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총리님 말씀 중에는 외람되지만 잘못 알고 계신 점도 있는 것 같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짧게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현장에 가서 거기가 모든 지역의 분쟁의 시범 케이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한 발짝도 진전 없이 그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동남권 신국제공항, 더 정확하게 말해서 남부권 신국제공항은 반드시 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신공항은 안 되는 사업을 억지로 떼쓰면서 매달린 것도 아니고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선거 때 표 얻을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발표한 선심공약도 아닙니다.

지방이 살기 위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 사업입니다. 정부도 그것을 인정해서 정식으로 추진해 온 지 벌써 7년이나 된 사업입니다.

그것을 막판에 선거 논리, 정치 논리로 백지화한 것은 뼈아픈 실책입니다. 되게 되어 있는 사업을 마지막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방의 희망을 고대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염원해

온 모든 분들께 정말로 죄송한 생각입니다.

신공항의 좌초를 지켜보면서 기득권이 되어 있는 거대공룡 같은 수도권 중심 대한민국의 높은 벽을 절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은 국가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이고 새로운 개척지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고른 발전에 대한민국 국가 재도약과 선진 대한민국의 길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태** 존경하는 조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두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이두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준비한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민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항들이 있어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5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전국 3500여 개 지역아동센터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확대,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관, 이와 관련해서, 이 연설 내용과 관련해서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좀 해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잘못된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잘못된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를 갖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다시는 이런 잘못된 문제 제기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방학 중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난 정부 시절에 분권교부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월 현재 그 예산이 확보된 사항을 살펴보니 3064억 원이 이미 편성이 됐고요, 저희들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것이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비만 해도 2010년에 비해서 올해 한 155억가량이 늘어났고요, 지금 1개소당 지원하는 운영비만 해도 지난해 320만 원이던 것이 370만 원으로 증액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에 더해서 아동복지교사 지원이라든지 특화센터 지원이라든지 야간보호, 물론 야간보호는 복권기금에서 예산 지원을 받습니 다마는, 이것까지 다 합치면 올해 지역아동센터에만 국비가 1100억 원 가까이, 지난해에 비해 200억 원 증원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이 액수는 2007년에 비해서 6배가량 증원된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325억을 확보를 했고요, 이제 보건소에 갈 경우는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민간 병·의원에 가는 경우에도 백신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하면서 144억 원을 민간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민간 병·의원에 갈 때도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 제기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두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근 쌍용차 퇴직자와 무급휴직자 및 가족들이 연쇄적으로 자살을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용차 근로자 문제 및 이 대책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8월 6일 노사가 쌍용차 회생을 위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동 합의서 내용에는 일반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내용, 무급휴직자에 대해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 합의서 내용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우선 2년 전 쌍용자동차 사태로 인해서 실직한 근로자들 가운데 몇 분께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쌍용차 실직근로자 그리고 무급휴직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TF를 구성을 해서 평택시·경기도 등과 함께 긴밀한 공조를 해서 재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등을 시행했고,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퇴직자 2100여 명 가운데 67.5%가 3월 7일 현재 재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약 3분의 1가량의 실직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취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시 합의했던 내용이 큰 줄기로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 두 가지에 관해서 사측과 그리고 실직근로자들 사이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의내용 중 1년이 경과한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한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측은 ‘아직 공장가동률이 71%에 불과하고 현재도 여유인력이 130여 명이 있는 만큼 신규인력으로서 무급휴직자 등을 복귀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생산물량이 충분치 않다’ 하는 입장이고, 반면에 실직근로자 특히 무급휴직자들은 1년이 경과했다는데 좀더 방점을 두고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회사에 복귀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입장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일반 조합원은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는

합의사항인데, 이와 관련해서 사측은 ‘당시 파업에 관여했던 외부 인사와 간부 조합원들의 경우는 일반 조합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인 반면에, 실직근로자들의 경우는 ‘일반 조합원이라 함은 모든 조합원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아직까지 합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측에서 형사고발한 것과 민사소송 제기를 한 부분 가운데 2010년 1월 5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일반 조합원으로 분류했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지금은 간부 조합원과 그때 파업에 관여했던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 민사상·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양측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중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두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감사합니다.

○이두아 의원 다음은 법무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는 2010년 2월부터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인데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는 과거 20년 동안 논의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의 장을 달리하면서 사법개혁이 계속 논의되는 것은 그동안 이루어진 사법개혁이 국민들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3월 10일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문이 발표되자 검찰에서는 이번 합의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안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합의안의 주요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장관께서도 ‘피의사실 공표 부분을 제외하고는 검찰은 더 이상 개혁할 부분이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는데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에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이 모두 반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과연 검찰은 정말 그 피의사실 공표 외에는 전혀 개혁할 부분이 없다는 취지의 견해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동안에 사법개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더 개혁할 점이 많아서 사법개혁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피의사실 공표 부분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개혁할 부분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사개특위 6인 소위에서 검찰개혁에 관해서 10개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중에서 피의사실 공표랄지 기소검사실명제랄지 그것은 찬성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제정을 통한 새로운 기구의 신설이거나 또 기능 폐지를 통해서라기보다는 현행 법률하에서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컨대 특별수사청의 경우에 판사·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검찰청인데요,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하에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특임검사제도의 활용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이었고,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역시 그동안 중수부의 순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능을 법률로 폐지하기보다는, 무죄가 많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무죄평정을 강화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사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만 하도록 해서 일선 청의 수사 지휘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하게 하되 그때도 예비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두아 의원 그런데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자 모 석간신문 1면에 ‘중수부 폐지안 확정’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 8명 중에 7명이 중수부 폐지안에 찬성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기본적으로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랄지 모든 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법무부의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두아 의원** 그리고 특별수사청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사람의 허물을 캐고 형벌을 정하는 판검사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장관께서도?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렇습니다.

○**이두아 의원** 그렇지만 판검사의 비리 척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특별수사청 설치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견해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렇습니다.

○**이두아 의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현재 특임검사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어느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해서, 검찰청의 검사랄지 검찰청 직원이랄지 그런 사람이 수사를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두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북한의 이복남매가 아버지의 100억대 유산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들었습니다.

○**이두아 의원** 그리고 탈북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한 후 가족관계와 관련해서 쟁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두아 의원**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또 국내에 탈북자 수가 2만 명에 이릅니다. 남북한 주민 간의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소송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일 것입니다. 이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두아 의원** 또한 미래 통일사회가 되었을 경

우에도 가족관계라든가 상속 문제라든가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건이 법원에 제기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독일의 경우에 비추어 장래 발생할 이런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죠?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두아 의원** 현재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김정은의 세습체제 구축으로 북한의 권력구도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따른 북한의 붕괴에 의한 통일이라든가 또는 남북의 조기 통일이 현실로 닥칠 경우를 하루빨리 대비해야 할 것인데요. 정치·경제·안보·사회·문화적 충격을 완화시킬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문화 분야 등 북한 법령을 선별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남북한의 법제 통합은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나 정부 및 민간의 연구 학술 활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중복·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비공식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총리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아까 말씀하시는 남북 주민 사회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해서는 특별법이 정부 입법안으로서 준비되고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두아 의원** 심사 중입니다. 아직 제출되지는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제출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검토하고 있고요. 북한 사태의 급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정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장차 통일이 되는 경우에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시기가 언제가 되든 그건 필요한 준비 작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아 의원** 제가 법사위 소속 위원이기 때문

에 법제처라든가 대법원이라든가 법무부에 이런 사실을 확인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협의기구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고 각 부처 간에 필요한 분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문제나 비효율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총리께 이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이두아 의원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법제 통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정부에서는 각 부처를 통합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총리실 수준의 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통일을 대비해서 각 부처나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 등을 파악해서 좀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총리실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이 적합한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아 의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은 우리 사회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꿈꾸는 법치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도 그 구체적인 계획인 법제 통합과 정비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통일 사회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죠?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이두아 의원 사회적 분쟁들에 대해 최종적 판결을 내리는 법정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사회적 분열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위해서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국민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국민들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고 국민들 관점에서는 검찰이나 법원의 수사나 재판작용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많은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나 법원에서 잘 수용을 해서 개선해 나

가는 노력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이런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아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국민 중 77.9%가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98.8%는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를 이용한 한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 세 가지를 개혁하면 차기 지도자로 무조건 뽑아주겠다’ 이런 질문에 놀랍게도 1위가 사법개혁이었습니다. 2위가 부동산 문제, 3위가 교육 문제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국민은 사법정의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법관 출신으로 사법부가 이번 사법개혁에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로서 검찰이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두아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서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일하겠다고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북한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현대사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폭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작지만 제 힘을 보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북한인권 문제는 전 세계 인권단체와 양심세력이 한 목소리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인류적인 현안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국의 체계적인 폭력과 탄압에 노출돼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여섯 곳에 정치범수용소를 운영 중이며 수감자는 15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상당수 탈북자들의 증언은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일관적입니다.

지난 1월 13일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011 세계의 자유’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39년째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선정했습니다.

총리, 이 소식에 대해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두아 의원 지금 좀 전에 보신 사진들은 북

한 내부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떠돌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숫자가 대략 10만 명, 많게는 2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두아 의원 우리 정부는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북한 인권 개선책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산하에 북한 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인데요, 총리께서는 독일 분단 당시 서독이 잘츠기터에 설치한 중앙기록보존소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들었습니다.

○이두아 의원 그리고 이 중앙기록보존소가 통일 전 수행한 기능과 통일 후 역할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실 텐데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미흡합니다.

○이두아 의원 동독의 인권탄압 사례를 수집하고 보존했다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인권위원회에 설치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도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러한 기능이 반드시 시행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더 확실한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아 의원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이두아 의원 맞습니까, 예.

서독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가 과거 동독의 압제자들에게 그랬듯이 우리의 북한인권기록관도 김정일과 북한 정권의 부역자들로 하여금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신들의 인권유린 행위로 인해 기소될 수 있고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져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해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유감스럽게도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이상 계류 중입니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와 이념적 경사 때문에 인권을 침해한 세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은 지적으로는 위선을 따르고 도덕적으로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바로 이웃에 사람들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사악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 사악을 외면하거나 조장하고도 온전한 사람으로 남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198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비젤의 “중립은 억압자를 도울 뿐 억압당하는 자를 돕지 않으며, 침묵은 고문자를 도울 뿐 고문당하는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는 가슴 깊이 되새겨 봐야 합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둔 우리 동포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을 찾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합쳐 행동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인권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통일의 시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통일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남북한 법제 통합, 북한 인권에 대한 노력 등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향후 분명한 성과로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희태 존경하는 이두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출석 의원(27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강용석	강창일	강고승	강고흥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장제원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병국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정대근	정하균	정혜결	정희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창수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조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차명진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태열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박순자	박영선	박은수	박종근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홍희덕	황우여	황진하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개의 시 재석 의원(109인)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강기갑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곽정숙	권선택	김금래	김낙성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김무성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송영선	송훈석	신진	신낙균	김성식	김성조	김성수	김세연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김정	김진애	김창수	김충조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김태원	김학용	김효재	노영민	
우재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박민식	박보환	박선영	박주선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박준선	박희태	변웅전	변재일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서상기	신영수	안규백	양승조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유기준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유성엽	유일호	윤석용	윤진식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상민	이사철	이상권	이성남	이성현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애주	이영애	이용섭	이용희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은재	이인기	이윤성	이정현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전 혜 숙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영 택	주 호 영
진 수 희	최 경 희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재 성	현 경 병	홍 사 덕
홍 희 덕			

○속개 시 재석 의원(73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권 영 길
김 금 래	김 기 현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소 남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유 정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호 연	나 성 린	노 철 래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보 환	배 영 식	백 원 우
변 응 전	성 윤 환	손 범 규	신 상 진
신 성 범	심 재 철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윤 석 용	윤 진 식	이 미 경
이 사 철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진 복
장 병 완	전 여 옥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병 국	정 진 섭	정 수 성	정 영 희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조 원 진
조 전 혁	주 승 용	진 수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허 태 열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우 여			

○산회 시 재석 의원(46인)

강 석 호	김 금 래	김 낙 성	김 무 성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소 남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혜 성	김 효 재	박 기 춘
박 영 선	박 병 석	박 보 환	박 희 태
원 회 목	유 선 호	유 일 호	이 경 재
이 두 아	이 애 주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진 복	이 철 우	이 화 수	전 현 희
장 광 근	정 갑 윤	정 병 국	정 옥 임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조 원 진
조 전 혁	조 해 진	진 수 희	최 규 성
홍 일 표	황 우 여		

○청가 의원(8인)

권 성 동	박 영 아	박 우 순	안 상 수
이 재 선	정 두 언	진 영	허 천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권 오 을
입 법 차 장	김 성 곤
의 사 국 장	한 공 식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법 무 부 장 관	이 귀 남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 병 국
보건복지부장관	진 수 희
환 경 부 장 관	이 만 의
고용노동부장관	박 재 완
여성가족부장관	백 희 영

○출석 정부위원

여성가족부차관	김 교 식
방 송 통 신 위 원 장	최 시 중

【보고사항】

○의안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상찬 의원 대표 발의)

(2011. 4. 8 구상찬·유일호·김호연·차명진·김영선·홍정욱·윤상현·권영진·이혜훈·남경필·김영우·손숙미·박영아 의원 발의)

4월 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 발의)

(2011. 4. 8 유기준·김세연·김효재·유성엽·이화수·이종혁·정해결·이정선·김혜성·박종근 의원 발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4. 8 이명수·김용구·김을동·김창수·권선택·임영호·윤상일·김태원·정의화·김낙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1. 4. 8 조배숙·강창일·김성곤·김춘진·조영택·강봉균·윤상일·백재현·오제세·김영진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

(2011. 4. 8 박선영·김용구·김정권·노철래·박준선·윤상일·이두아·이주영·이진삼·장윤석·정수성·정하균·차명진·최경희 의원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 발의)

(2011. 4. 8 박선영 · 김용구 · 김정권 · 노철래 · 박준선 · 윤상일 · 이두아 · 이주영 · 이진삼 · 장윤석 · 정수성 · 정하균 · 차명진 · 최경희 의원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1. 4. 8 조배숙 · 김혜성 · 김춘진 · 이인기 · 이춘석 · 최규성 · 김재윤 · 오제세 · 윤상일 · 백재현 · 김영진 · 조영택 의원 발의)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1. 4. 8 유재중 · 김금래 · 이윤성 · 권영진 · 김소남 · 원희목 · 오제세 · 현기환 · 손숙미 · 윤석용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

(2011. 4. 8 이종걸 · 장병완 · 양승조 · 장세환 · 전해숙 · 권영길 · 조경태 · 김영진 · 안규백 · 김재균 · 정장선 · 조영택 의원 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1. 4. 8 유재중 · 김금래 · 권영진 · 김소남 · 원희목 · 오제세 · 현기환 · 안홍준 · 손숙미 · 윤석용 의원 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1. 4. 8 유재중 · 김금래 · 이윤성 · 권영진 · 김소남 · 원희목 · 오제세 · 현기환 · 손숙미 · 윤석용 의원 발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1. 4. 8 유재중 · 김금래 · 김소남 · 원희목 · 정옥임 · 오제세 · 현기환 · 안홍준 · 손숙미 · 정수성 의원 발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1. 4. 8 유재중 · 김금래 · 김소남 · 원희목 · 정옥임 · 오제세 · 현기환 · 안홍준 · 손숙미 ·

정수성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1. 4. 8 권성동 · 김태환 · 원희목 · 김성동 · 윤상일 · 장제원 · 유기준 · 이윤석 · 박준선 · 허천 · 한선교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1. 4. 8 김춘진 · 유성엽 · 오제세 · 김성곤 · 김영진 · 김상희 · 이윤석 · 정장선 · 서종표 · 김재윤 의원 발의)

4월 9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청원 제출**외국인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상정 촉구에 관한 청원**

(2011. 4. 8 서울 마포구 연남동 255-34 서진 빌라 C동 401호 왕애려 외 1800인으로부터 광정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의견서 제출**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2011. 4. 8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질문서 제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질문서**

(2011. 4. 8 박주선 의원 제출)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서(4건)

(이상 4건 2011. 4. 8 유성엽 의원 제출)